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2022. 1.

해양경찰청

목 차

Ⅰ. 2021년 주요 성과와 반성 ····· 1

(1) 주요 성과	(2) 보완 필요사항

Ⅱ. 2022년 정책 여건과 전망 ····· 6

Ⅲ. 2022년 정책 추진방향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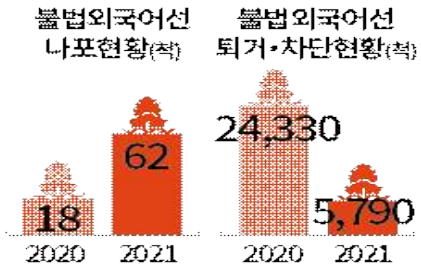
(1) '22년 정책추진 전략	(2) '22년 정책추진 체계도

Ⅳ. 주요 정책과제 ····· 10

(1) 현장 친화적 활동	(2) 국민 친화적 행정
(3) 동료 친화적 소통	(4) 미래 친화적 준비

Ⅰ 2021년 주요 성과와 반성

1. 2021년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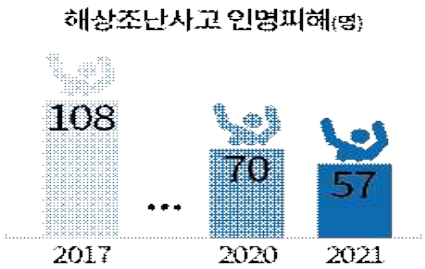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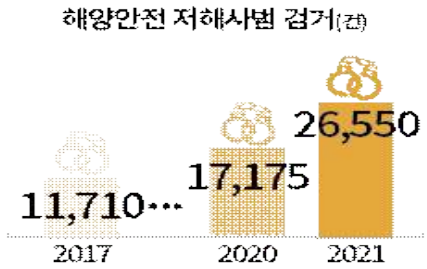
❶ 확고한 해양영토 및 권익 수호

- 방역대책 수립 후, 나포 중심으로 불법어선 대응 전환
- 경계미획정 해역 전략적 경비 및 통합방위 협력 강화
- 전담부서 신설·운영 등 미래형 해양경비체계 기반 구축

❷ 해양사고 구조대응 역량 제고

-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구조안전 시스템 개선
- 구조대원 등급화(2급/1급/마스터급) 및 현장특화 구조훈련
- 협업을 통한 예방과 위험구역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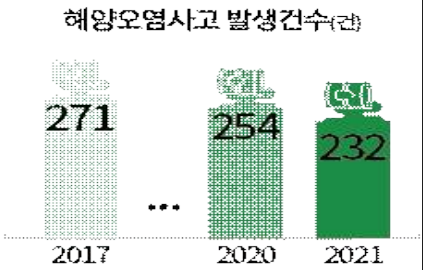
❸ 해양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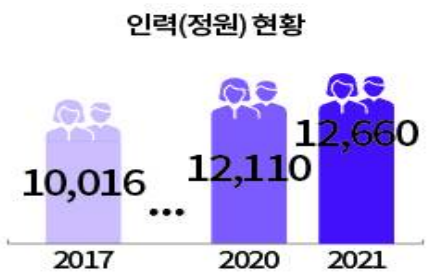
- 수사국 신설로 독자적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 기반 강화
- 해양 5대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으로 민생 보호
- 전문 인력 확충 및 첨단장비 도입 등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

❹ 해양오염 대응체계 고도화

-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해경-공공-민간" 합동 대응으로 전환
- 신 유형 오염사고 대비, 장비 확충 및 대응체계 개선

  * (인원) 1,009명→3,426명, (초동조치 참여율) 4.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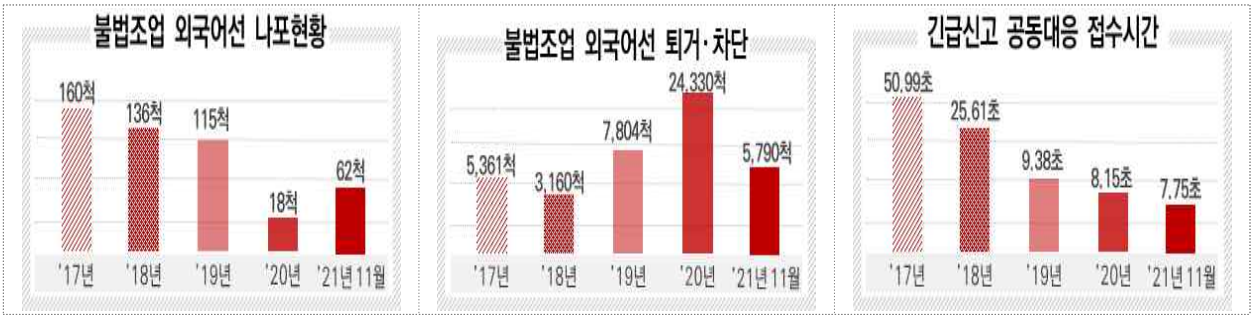
❺ 현장중심의 직무기반 확충

- 현장 인력·예산 확충, 사천서 신설 등 조직 정립
- 「해양경찰장비법」 신규 제정 등 독자적 법·제도 정립
- 미래 핵심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R&D에 중점

□ [경비] 확고한 해양영토 및 권익 수호

○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이후 적극적인 나포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질서 개선, **우리해역 어획량 증가**

* 한·중 어업문제협력 회의(9월), 어업공동위(11월) 등 외교회의와 서한문(6회)을 통해 중국정부 자정노력촉구 및 중대위반선박 직접인계 등 양국공조체계 마련



○ 비군사적 해상분쟁 대비 **'주변국 관공선 조우시 대응지침'** 마련 및 관할권 강화를 위한 **경계미획정 해역 순찰 강화**('20년 349회 → '21.10월 526회)

○ 드론 도입·운용·관리 등 기능별로 분산된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드론 전담부서**(첨단무인계) **신설**('21.1월), **해양경찰 드론관리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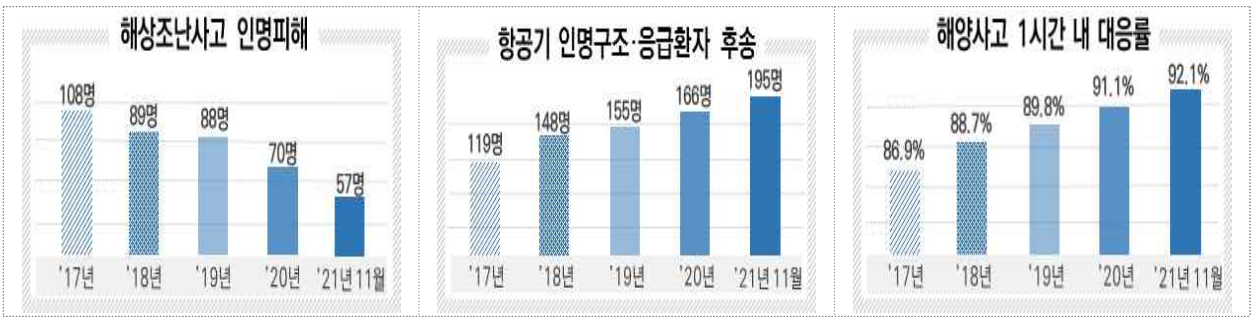
* '해양경찰 드론 발전계획' 마련('21.8월)으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보유 드론 정비

□ [안전] 해양사고 구조대응 역량 제고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배치구역 내 **연안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가 최근 5년 평균 대비 각각 **14%, 17.5% 감소**

* (활동실적) 인명구호 12명, 안전계도 97천명, 시설물점검 16천건

○ **시기별* 해양사고 대응계획** 수립, 선박 특성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시행** 및 사고대응 후 **사후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도입** 등 대비·대응 활동 강화



○ 중특단 훈련시설 준공(6월), 중특단 교관요원 보강 등 인프라 확충에 따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개편** 및 **구조 교육·훈련 강화** 기반 마련

○ 어민, 드론, 서퍼, 수상구조사 등 **다방면의 민간세력 확충*** 및 **특기별 조직 재정비**(수상구조, 수중구조, 드론 등)로 구조 사각지대 해소

* ('19년) 4,681명 → ('20년) 7,491명 → ('21. 10월) 9,559명 **<최근 3년 154% ⬆>**

□ [치안] 해양수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형사소송법 개정('21.1월)으로 **수사 독립성 확보**, 수사국 신설 및 해양경찰법 개정을 통해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 기반 강화**

* 3중 심사 체계(경찰서 - 지방청 - 본청) 도입으로 수사심사 검증 강화, 검사 보완수사요구율 개선(1월 16.3%→10월 3.7%) 등 수사심사 안착

○ 수사국 출범 후 제1호 특별단속인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 실시**

* 근본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점, 어민여론 등 분석, 관계부처(해수부, 해수청, KR, KOMSA 등) 대책회의를 통한 정책 제도개선 추진

○ 경찰청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해양경찰 KICS구축 추진***,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KICS 운영 인력(전산 7급 2명) 확보

* 사업계획서 작성(2월), 현업·정책 자문 T/F 구성 운영(3-4월), 사업발주–공고-계약, 사건수사시스템 등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스템 설계·분석 수행 (8-12월)

□ [환경] 해양오염 대응체계 고도화

○ 해양 사고 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전략 실행으로 오염물질 유출 방지, 유류이적 등 **배출방지조치 역량 고도화를 위한 방제훈련 방법 개선·시행**

○ **민·관 협업**을 통해 **원거리·도서지역**(52개소) **방제역량 강화, 지역의 자율적인 방제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내실화***

* 교육·훈련 중 재해 보상 보험 가입, 교육 자료 제작·배포, 방제창고 확대 배치 등

○ 괭생이모자반·적조 등 **자연 재난 극복**을 위한 **방제 지원 강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기본계획 수립·시행**

* 괭생이모자반 예찰(126회)·수거(240톤), 적조 예찰 815회(~11월)

□ [혁신] 현장 중심의 직무기반 확충

○ **주요사업비 20.2% 증액 등 역대 최대 예산**(1조 6,836억 원) **편성**, 함정 신조(3000톤 1척), 노후대체(함정 27척, 헬기 1대) 등 중요사업 반영

○ 그간의 역점사업인 **사천해경서 신설 및 직급상향*** **±84명 반영**

* 동해청장, 5002함 부장·기관장, 동해특수구조대장, 署 상황실장, 사법경찰관 등

○ **해양경찰 인적자원관리의 기준점 마련**을 위해 핵심가치·필요역량·행동준칙 등을 함축적으로 개념화 한 **해양경찰 인재상 수립**

○ 해경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법령 제정 및 제도 정비**

*「해양경찰장비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大令)』 등

2. 보완 필요사항

□ 인력 · 장비 보강을 통한 해양사고 구조 · 대응의 한계 직면

○ 사후 대응 중심의 인력·장비 보강으로 **사전 예방 상대적으로 저조,** 취약해역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 중심 '해양종합안전망' 구축 필요**

〈 '22년 개선방향 〉

✓ 현장 사전순찰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연안안전지킴이 등 예방 분야의 민·관 협력 확대 및 해양안전 문화 교육·홍보 활성화

□ 비군사적 해상분쟁 대비 해양경비력 부족

○ 최근 주변국은 **해양경비 전력**(함정·무인항공기 등)을 **대폭증강**하고 조직 권한을 강화 중으로 **우리 해양경비 전력 열세** 및 **비대칭*** **심화**

* 대형함정 척수 : 한국 35척, 일본 66척(약 2배), 중국 130척(약 4배)

〈 '22년 개선방향 〉

✓ **(광역해양정보망 구축)** 인공위성·무인기 등 첨단기술 감시장비 도입으로 실시간 감시범위 확대로 전력 열세 극복

✓ **(경비세력 증강)** 3천톤급 다기능 대형함정 단계별 확보·배치

□ 조직 구성원과 가치관의 다변화에 걸맞은 조직문화 형성 필요

○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 요구**

* '21년부터 조직문화 개선과제 추진 중,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확대 필요

〈 '22년 개선방향 〉

✓ 상호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 국 · 내외 정책 협업 · 소통 미흡

○ 국민소통·정책자문위, 주변국 협력관계 등 **소통·협의체 운영 저조**

〈 '22년 개선방향 〉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대외 창구 활성화, 화상회의 등 운영 다각화

Ⅱ 2022년 정책 여건과 전망

1. (대외)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대」 진입

□ 해양 패권의 시대 도래

○ 美·中 **해양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주변국과의 경계 미획정해역(제주 남방 대륙붕·서해·동해)에서의 **해양안보 관련 분쟁이 확산될 우려**

- **(중국)** '일대일로',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등으로 美·中 갈등 촉발
-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동맹' 등 동중국해 영향력 확대

√ 中 공세적 동진(東進)과 日 전략적 서진(西進) 속에서 국가 해양안보 전략 강화 및 해양 경비역량 제고 등 유관부처와의 범정부 협력을 통한 대책마련 필요

√ 韓-中-日 EEZ가 중첩되는 '7광구 대륙붕'은 '25.6월*을 기점으로 해양안보 핵심 화두로 부각 전망 * 韓·日 대륙붕협정 파기 可 ⇒ 日 영향력 확대, 中 개입 본격화(유전개발)

○ **주변국**(중국·일본)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해양경찰력 강화를 추진 중**

* (中) 해경 인민무장대 이관.해경법 제정 / (日) 해상보안체계.해양상황능력 강화

□ 미래 변화의 가속화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 발달**과 **사회·문화적 가치의 다변화**를 다수의 연구에서 미래 변화의 공통된 방향성으로 제시

○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래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 뉴 노멀(New Normal)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로의 필요성 증대**

< 5가지 핵심 분야별 미래변화 전망 >

기술	인구	사회	환경	국제관계
신기술 활용 증대, 새로운 문제 등장	저출산·고령화,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 다변화 정부·시민 갈등	환경문제 부상 에너지 구조 변화	다국화 질서 도래 정보력 주목

출처 : KDI, 2030 메가트렌드 (2019), 美 NIC Global Trend 2040 (2021) 등

2. (대내) 「미래형 해양경찰」로의 변화 요구

□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첫걸음 단계

○ 핵심 분야(기술·인구·사회·환경·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내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장기 플랜을 가지고 **단계적 계획 추진 중**

분야	주요 변화	대응 방안
기술	AI 등 스마트 기술 발달, 사회 전반에 기술 적용 확대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경비체계 전환 단계적 추진**
인구	고령화 및 병력자원 감소, 의무경찰 폐지('23년)	청사방호, 치안보조 인력 등 **의무경찰 대체 방안 마련·추진**
사회	문화적 다양성 확대, 상호존중의 가치관 확산	MZ 세대, 여성 비율 증가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방안 마련·추진**
환경	환경문제 관심 증대, 친환경 정책 및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 선박, 해양쓰레기 감축 등 **해양 환경보존 활동 강화**
국제관계	기술·정보력 등이 새로운 국력의 구성요소로 등장	MDA 체계 구축 등 **해양정보의 융합·분석 체계 강화**

□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대외 관심도 증대

○ 조직 재출범 이후 **국회 요구자료 및 기능별 업무설명 요구 증가**세, 올해부터 상시국회 도입으로 **향후 국회 대응소요가 더 늘어날 전망**

○ 해양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및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공개 필요**

□ 조직·인사 관리 체계의 고도화 노력 필요

○ 최근 5년간 3,000여 명의 정원 증가와 조직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명확한 기준이 미흡**

○ 새로운 행정수요, 업무량 불균형 등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조직·인사 관리 요구 강화**

Ⅲ 2022년 정책 추진방향

1. '22년 정책추진 전략

□ [현장 친화적 활동] 현장 강화를 통한 예방 중심적 임무 수행

○ 축적된 현장의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안전 위해 요소 및 해양권익 침해 활동 등을 사전에 예측, 선제적으로 대응**

○ 업무체계 및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장비 도입 및 조직체계 고도화**, 현장 중심의 **인적 자원 확충 및 교육훈련 강화**

□ [국민 친화적 행정] 국민 삶 속에 다가가는 맞춤형 정책 확대

○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업무 연계 및 협력 관계 강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 및 국민편익 중심의 정책 확대**

○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문화 교육·홍보 활성화**, 국민과 소통하고 한발 더 다가가는 **전략적인 홍보 활동 전개**

□ [동료 친화적 소통] '우리'를 우선하는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 다양한 입직 경로별 구성원과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상호 공감을 통한 조직의 공동목표 추구**

○ 주요 정책을 소속기관과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 확대, 현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

□ [미래 친화적 준비] 첨단기술 활용 등을 통한 업무체계 전환

○ 위성·무인기·빅데이터 등 **미래 첨단기술의 현장업무 활용 분야 확대, 적극적인 R&D 사업**을 통한 **업무 영역별 전문 기술 지속 개발**

○ **광역해양정보인식(MDA) 체계 및 위성센터 구축**을 통한 해양경비체계 단계적 전환, **미래형 조직체계 추진 및 중장기 전략 마련**

2. '22년 정책추진 체계도

미 션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비 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슬로건	- Always go & check! - <출동 · 점검의 생활화>

추진 전략	세부 실천전략	
현장 친화적 활동	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다. 해양경찰 조직체계 고도화 라. 체계적 업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마.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장비 도입 바. 현장 업무 시스템 고도화 사. 현장 인력 중심의 전문성 제고
국민 친화적 행정	가. 국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제공 나.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라. 수혜자에게 공감 받는 서비스 개선 마.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전략 홍보
동료 친화적 소통	가. 상생하는 조직문화 조성 나. 현장부서 근무 여건 개선	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미래 친화적 준비	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업무체계 전환 나. 미래형 조직체계 구축	다. 현장 중심형 미래 기술개발 라.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 마련

Ⅳ 주요 정책과제

전략		정책 과제	소관
현장	선제적 안전관리	1. 현장부서 일일 상황분석을 통한 예방 중심 상황관리	종합상황
		2.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구축	해양안전
		3. 빅데이터 분석 기반, 권역별 해양사고 대비·대응	수색구조
		4. 연안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해양안전
		5. 대형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 선박·시설 중점관리	오염예방
	업무체계 개선	1. 경비구역「섹터관리제」운영	경비
		2. 주요장비 예비부품 확보로 상시 정비지원체계 강화	장비관리
		3. 적극적 협력 추진으로 국제해양위기 대응력 강화	국제협력
	조직체계 고도화	1. 수사개혁 완성을 위한 수사 조직체계 정비	수사기획
		2.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추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장비관리
		3.「광역 관제센터」신규도입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	교통관제
		4.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방제기획
	법제도 개선	1. 해양환경.임무 특성을 고려한 장비도입 법제화 구축	장비기획
		2. 미래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기동방제
	신규장비 도입	1. 복합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다목적 방제함정 등 장비 확충	방제기획
		2.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장비 적기도입	장비기획
		3. 주지휘 통신망 전환을 통한 상황대응 역량 강화	정보통신
	업무 시스템 고도화	1.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확대 설치	관제기술
		2. 해양경찰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추진	빅데이터
		3. 저탄소・친환경 Green 바닷길 운영	교통관제
		4.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정보통신
		5. 인공지능(AI) 기반 닻 끌림 경보시스템 개발	관제기술
	현장인력 전문성 제고	1. 재난대비 체계 및 교육훈련 통한 구조·구급 역량 강화	수색구조
		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관리 체계 추진	인사
		3.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정착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훈련 강화	교육훈련
		4. 수사관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수사교육 강화	수사기획
국민	국민 밀착형 서비스	1. 민생침해·안전저해 사범 단속강화 및 현장 대응력 제고	형사
		2. 생계형 범죄 현장계도 형사활동 등 국민 친화적 법집행	형사
		3. 조업질서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다각도 대응	경비
		4. 국민이 체감하는 항만미세먼지 저감 추진	오염예방
	민관협력 강화	1. 민·관 구조협력 체계 고도화 및 국제수색구조 협력 증진	수색구조
		2. 민·관 협업 기반 복합해양사고 전문역량 강화	기동방제
		3.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협력 체계 구축	오염예방
		4.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산·학·연 업무협약 확대	교육훈련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 강화	방제기획
		6.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민참여 플랫폼 강화	장비기획

전략		정책 과제	소관
	국민편익 증진	1.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빅데이터
		2.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 응급체계 구축	수색구조
		3. 운항자 친화적 선박교통관제 정책 추진	교통관제
		4.「수상레저안전법」분법 및 법령체계 개편	수상레저
		5. 국민편의를 대폭 강조한 수상레저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수상레저
	서비스 개선	1.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 조사 및 결과 환류 확대	행정법무
		2. 상황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상황대응 체계 확립	종합상황
		3. 지방청 중심 수사심사체계 확립'으로 책임수사 구현	수사심사
		4. 실질적 수상레저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수상레저
	국민친화 홍보	1. 연안안전교실 등 국민 친화형 교육 확대	해양안전
		2. 전략홍보로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음악을 활용한 기획홍보 강화	대변인
동료	상생하는 조직문화	1. 상호 존중·배려하는 동료 친화적 소통 활성화	행정법무
		2.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3. 상호 이해도 증진을 위한 순환보직 활성화 방안 추진	인사
		4. 해양경찰 '이색 공무원' 발굴을 통한 자긍심 제고	대변인
	근무여건 개선	1. 현장·사무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스마트 워크센터' 마련	운영
		2.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양성평등
	예방중심 감사·감찰	1.「바로BARO·해海플랫폼」을 통한 적극행정 기반 구축	감사
		2. 예방적 공직복무 관리를 통한「주요 비위사고」감소	감사
미래	첨단기술 활용	1. 광역 해양 정보·상황인식 체계 구현	경비
		2.「해양경찰위성센터」인프라 구축	스마트
		3. 대형 해양재난에 대비한 첨단 수색구조 체계 마련	수색구조
		4. AI 기반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	경비기획
		5. 플랫폼 'ZEPETO' 활용「해양경찰 메타버스 세계관」구축	대변인
	미래형 조직체계	1. 사법경찰관 정원 확보 및 전문수사 인력 육성(채용)	수사기획
		2. 미래 선진 해양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개선	과학수사
		3. 안정적 항공인력 확보를 위한 항공교육센터 설립	항공
	미래 기술개발	1.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전국 통합 클라우드 VTS 개발	교통관제
		2. 공공복합 통신위성 도입 및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	정보통신
		3. VTS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 및 관제지원 기술 개발	관제기술
	중장기 전략마련	1. 미래안보 안전을 위한 해양경찰 플랫폼 전략 추진	기획재정
		2. 구조안전 임무에 최적화된 미래 파출소 모델 개발	해양안전
		3. 친환경 수상레저기구 제도권 수용	수상레저
		4.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블루카본' 보호대책 추진	방제기획

현장 친화적 활동

(Field-Friendly Activities)

현장 친화적	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종합상황실
	1. 현장부서 일일 상황분석을 통한 예방 중심 상황관리	

[과제목표]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현장부서 세력이 치안수요 · 해역특성 등 위험요소를 고려한 상황관리 및 순찰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주요 내용

① 현장부서(함정, 파출장소, 항공대 등)는 **일일 취약요인 및 취약지 분석**

< 상황분석 요소 >

- **(계절별 취약 요소)** 봄・여름・가을・겨울, 환절기에 따른 경비구역 및 관할 구역 내 취약 요소 분석
  * 예) 봄・가을 : 갯바위 낚시・해루질, 여름 : 해수욕장・스쿠버 등 분석
- **(어기별 취약 요소)** 어기별 주 어종 조업해역 등 요소 분석
- **(해양기상에 따른 취약 요소)** 기상특보 발효 시 취약선박 집중관리 등
  * 예) 원거리 조업선, 예・부선, 다중이용 선박(낚시어선 등)
- **(기타 사고다발해역 등)** 관할구역 사고 다발해역 등에 대한 집중・예방 순찰

② **종합상황실**은 일일 상황분석 요소를 총괄하며 **현장부서의 예방 경비 · 순찰 계획**을 **조정 · 통제**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 체계 유지

※ 종합상황실 및 현장부서는 매월 말 취약요인 및 취약지 분석결과를 빅 데이터 化하여 유지・관리 ⇒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취약 요소별 상황관리 노-하우 확보

⇒ **상황분석절차 및 활용관련 세부계획 작성 · 시행(1월 中)**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사고예방 중심 상황관리 추진 세부 계획 수립・시행(1월)
매월	❖ 취약요인 및 취약지 분석결과 빅 데이터 유지・관리(상황실 및 현장부서, 매월 말)

현장 친화적	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해양안전
	2. 취약 해역 종합 안전망 구축	

[과제목표] '22년 내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운영체계 정착

□ 추진 배경

○ 매년 **부서별 분산 추진되는 해양사고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재산 또는 환경 피해 지속 발생**

○ 각 기능별 **취약해역 및 취약요인**을 **주기적으로 분석**, 모든 현장조직이 공유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사고 예방역량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개념·기준 정립)** 경비·안전·수색·관제·방제 등 각 **부서별 취약해역 개념** 및 취약요소* 등을 고려한 **취약해역 지정 기준* 마련**

* 치안수요, 해양사건·사고 통계, 월별·계절적·시기별 취약요소 등 분석

○ **(취약해역 선정)** 부서별 지정기준에 따라 **해역별 취약해역**(㉠~㉤) **선정**

* 각 부서별 취약해역 중복 지정 시 집중 취약지역으로 선정·관리

○ **(안전대책 마련)** 취약해역 내 **현장조직**(함정, 파출장소, VTS, 항공기 등) 간 **정보공유 등 사고 예방대책** 및 유사 시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주기적인 관리·개선) 매주 취약해역 지정**(주간회의) 및 **매월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분석**(월간회의)을 통한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고도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취약해역 안전대책 수립 및 해역별 취약해역 지정·운영(1월)
2분기	❖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이행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4월)
3분기	❖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관련 상반기 중간 점검 및 정책수용도 조사(7월)
4분기	❖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방문(12월) ❖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운영 성과 분석(12월)
연중	❖ 매주 취약해역 지정·운영 및 매월 성과 및 우수사례 분석

현장 친화적	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수색구조
	3. 빅데이터 분석 기반, 권역별 해양사고 대비·대응	

[과제목표] 지방청별 해역 특성에 맞춘 해양사고 대비·대응방안 수립

□ 추진 배경

○ **(빅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해상조난사고 통계」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해양사고 **발생경향 및 특성, 취약요소 분석** 필요

○ **(해역별 맞춤형 예방대책 필요)** 본청에서 **모든 해역을 통할하는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경우** 일부 해역에서는 **현장 적용에 어려움*** **발생**

* 전국적으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부청의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특성으로 레저선박 사고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 예방대책의 관점전환 필요

○ **지방청 중심**의 예방대책 수립으로 **현장 친화적 대응 역량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현장 친화형 대책마련)** 본청의 **거시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경서 별 **관할해역 세부적 사고특성을 분석, 자체 대비·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 **(수난대비기본훈련 반영)** 관할해역 사고특성 분석 결과,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의 사고를 수난대비기본훈련에 반영, 대응훈련 실시**

○ **(긴급출동항로 관리)** 사고다발 해역을 설정, **긴급출동경로 사전점검 및 어망 등 장애물 극복훈련** 실시 등 **지방청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역별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분석 및 결과 하달(2월)
2분기	❖ 지방청 단위 해역별 특성에 맞춘 자체 대비 대응 계획 수립(5월)
3분기	❖ 해역별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 이행사항 점검(9월)
4분기	❖ 연간 사고발생 경향을 추가로 분석하여 자체 대응계획 업데이트(12월)
연중	❖ 사고다발해점 설정 후 출동경로 사전점검 및 어망 등 장애물 극복 훈련

현장 친화적	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해양안전
	4. 연안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과제목표] 최근 5년 평균 대비 사망자 수 10% 감소(5년 평균 119명 → '22년 107명)

□ 추진 배경

○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레저·관광 등 연안이용객 증가 대비 필요**

○ 도서 개발 등으로 인해 **바다를 찾는 국민들은 증가**한 반면,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한 **예방적 안전정책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위험구역 관리)** 지자체와 합동 연안위험도 조사를 통한 위험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 위험구역 내 안전관리시설물 우선 설치 추진

* 해경서별 지역협의회('21.10. 설치)를 통해 지자체·유관기관 업무협력 강화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가칭)」 제정, 근무감독을 위한 전용 앱 개발, 위험구역별 구호물품 조사 및 보급

* 우수인력 모집을 위한 조기 사업공고(2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교육·훈련 강화

○ **(해양안전문화 홍보)** 사회공헌기업과 함께하는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공익광고 및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조사

* 어린이 대상 구명조끼 무료배부, 주요 해수욕장 구명조끼 애드벌룬 설치 등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022년 연안안전지킴이 사업계획 수립(2월) ❖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가칭)」 제정 계획 수립(2월)
2분기	❖ 연안안전지킴이 전용 앱 개발 및 구호물품 보급(5월) ❖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6월)
3분기	❖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홍보 추진(7~8월)
4분기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개선안 마련(11월) ❖ 2022년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12월)
연중	❖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및 운영(5월~10월) ❖ 연안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보수(연중)

현장 친화적	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오염예방
	5. 대형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 선박·시설 중점관리	

[과제목표] **고위험 선박·시설 점검 확대** (3년평균) 763회 → ('22년) 801회(5%↑)

□ 추진 배경

○ 최근 원유부이 등 해양시설의 오염사고 발생*, 유류 해상환적 수요 증가(연평균 11%↑) 등 **고위험 선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 석유공사('20.9월), S-OIL('20.1월, '21.3월) 등 오염사고 3건 발생, 기름유출 약 27kℓ

○ 고위험 선박·시설의 예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시 현장조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현장 친화적 오염사고 예방체계 마련 필요**

* 해사감정사·오염비상계획서 등 법정 자격·매뉴얼을 정부정책과 접목·활용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고위험 선박·시설 해양오염사고 예방관리 강화**

- 「원유부이 해양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21.5월)」 이행여부 중점 점검
  * 안전설비 보강, 작업 제한기준 준수 등 개선대책 이행여부 관계기관 합동점검
- 대규모 기름저장시설·하역시설 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 관계기관 합동 해양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발굴·개선
- 해상환적(STS) 작업 중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환적물동량 증가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 마련

○ **재난 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한 예방체계 구축**

- 고위험 **장기계류선박 잔존유 제거 등 해양오염예방 사전조치 강화**
- 선종별·규모별 **맞춤형 선박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표준안 마련**
- 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 감정사 양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고위험 재난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STS 해상환적, HNS야적장 등)
2분기	❖ 선박 해양오염비상계획서 표준안 개선 협의체 운영 및 개선안 도출
3분기	❖ 관계기관 합동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4분기	❖ 자체 감정사 중심의 지방청별 해양오염사고 조사 지원팀 구성

현장 친화적	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경비과
	1. 경비구역「섹터관리제」운영	

[과제목표] 관할구역 내 예방중심의 전략적 해양경비 강화로 미래형 함정 운영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 관할구역에 대한 경비함정별 '해양경비정보' 분석과 취약개소 파악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책임의식 고취 필요**

○ **최일선 현장**(경비함정)의 **'해양경비정보' 분석·활용** 경험 축적으로 **광역 해양 정보·상황인식 체계 구현**을 위한 **현장여건 마련**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함정 단위로 **'해양상황분석회의' 개최** 및 관할해역 **취약요소·위험도 분석** 후 **출동계획*** **수립 등 함정별 분석체계 마련**

【 경비구역「섹터관리제」운영 계획 】

❶ 함정 안전운항	❷ 책임구역 분석	❸ 적극적 예방활동	❹ 상황 대응
자체사고 방지, 당직근무 내실화	관할 책임경비, 경비정보 분석	주변 통항선박 항행 안전정보 제공	해역별 맞춤형 임무

❶ 승조원(당직관, 신임 등) 대상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캠페인 이행**으로 운영 내실화
* 함·정장 종이해도(위험개소 기록) 활용, 당직근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

❷ 소속기관에서 공유한 관할구역 치안정보 분석으로 **출동 중 중점 활동사항 지정**

❸ 주변 **통항선박** 대상 **항행 안전정보**(기상·항로장애물·기타 안전관리 사항) **제공**

❹ **해역별**(광역 : 불법조업·조사선 대응, 내해·연안 : 해양사고 대응) **맞춤형 상황대응**

○ **서해청 운영 성과 분석**(12월) 및 **지방청별·해역별 '섹터관리제' 수립**(1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경비구역 섹터관리제 운영 계획 수립(1월) 및 지방청별 시범운영(2~3월)
2분기	❖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식별(4월), 전면시행(5월~)
4분기	❖ 소속기관별 성과분석(11월) 및 본청 주관 우수 사례(운영성과 등) 공유
연중	❖ 해양상황분석회의(서별 월 1회)

현장 친화적	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장비관리
	2. 주요장비 예비부품 확보로 상시 정비지원체계 강화	

[과제목표] 함정·항공기 주요장비 예비부품(예산) 확보(정비지원체계 강화)

□ 추진 배경

○ 함정·항공기의 중요장비 성능유지를 위한 주기적 정비 및 응급 수리에 따른 부속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주요 부속품 부족 및 조달에 장기간 소요, 주요 부속품을 사전 확보를 통해 원활한 정비와 임무수행 지원체계 구축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예비부품 LIST 확정) 중요부속품중 조달에 장기소요 부속품 위주

※ LIST는 각 관계 기능별(보급, 통신, 항공, 장비기획)로 선정

○ (관련 규정 마련) 예비부품 확보 근거의 명확화(행정규칙 제정)

※ 향후 「해양경찰장비도입법」에 포함(개정)하여 법적근거 확보

○ (예산 대응·확보) 소요 예산책정후 '23년도 예산요구(대응)

※ 소요예산 감안, 연차별 예산 확보·보급지원 실시(각 관계 기능별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예비부품 LIST 확정【1월】, 내부규칙 제정【3월중】, '23년도 예산요구서 작성【3월】
2분기	❖ '23년도 예산요구(대응)【4월 ~ 5월】 : 기획재정부
3분기	❖ '23년도 예산요구(대응)【9월】 : 국회(필요시 증액 요청)
4분기	❖ '23년도 예비부품 구매계획 및 관리방안 검토【11~12월】
연중	❖ 예비부품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자료 지속 수집, 중·장기 확보 방안 검토 등

현장 친화적	나.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국제협력
	3. 적극적 협력 추진으로 국제해양위기 대응력 강화	

[과제목표] NPCGF 성공적 개최(2회), 주요국 정례회의(6회), 다자회의 주도적 참석(3회)

□ 추진 배경

○ **해외사건·사고 발생 시** 국제협력 기능의 신속한 지원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 위한 적극적 협력업무 추진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NPCGF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 개최** 북태평양해역에서 회원국들(한·중·일·러·미·캐나다)과 해양위기 대응 및 정보교환 강화 위한 대면회의 국내 성공적 개최

*** 전문가회의 : '22. 4월, 서울 개최예정 / 기관장회의 : '22. 9월, 인천 개최예정**

○ **중국, 일본, 러시아**와 2년 동안 대면으로 개최되지 못한 **기관장급 정례회의 추진**, 주요 현안사항 논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통한 위기대응 협력 강화

○ **동남아 주요 교통로** 안전 확보 위한 **인니, 인도, 싱가폴과 정례회의** 재개

○ **다자협의체 주도적 참여** 통한 세계 해양이슈 적극 대응

*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CGGS), 북극이사회 위기대응그룹(EPPR)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NPCGF 개최 준비 TF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1~3월)*
2분기	❖ NPCGF 전문가 회의 개최 *(4월)* ❖ 한-러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5월)* / 한-싱가포르 정례회의 *(6월)* ❖ HACGAM전문가회의 참석 *(6월)* / 북극이사회 EPPR 참석 *(6월)*
3분기	❖ 한-일본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7월)* / 한-인니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7월)* ❖ 한-인도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8월)* ❖ NPCGF 기관장 회의 개최 *(9월)*
4분기	❖ 세계해양치안기관장 회의 참석 *(11월)* ❖ 한-중국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11월)*

현장 친화적	다. 해양경찰 조직체계 고도화	수사기획
	1. 수사개혁 완성을 위한 수사 조직체계 정비	

[과제목표] **경찰서 수사과 업무량 분석을 통한 관서별 수사 정원 재조정**

□ 추진 배경

○ **(사법환경 대응)** 형소법 개정('21.1.)에 따른 연계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서별 **수사정원 현실화 필요**

* △ 수사심사관제도가 도입('21.1.14.) 되었으나 경찰서에는 심사관 정원 없음
△ 군사법원법 개정('21.9)에 따라 軍 관할 사건 일부를 해양경찰에서 처리 예정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경찰서 조직 재설계)** 1차 수사종결 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경찰서 **수사조직 재설계*** 및 **표준 수사정원 기준** 마련

* 경찰서 행정-조사 분리 시행 및 형사 班 체제에서 팀 체제로 전환 등

○ **(관서별 수사정원 조정)** 객관적 지표*를 통한 **수사업무량 객관화**하여 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정원 재조정**으로 수사역량 강화

* (지표 예시) △ 일반: 발생·송치사건 △ 수사: 고소·고발 △ 형사: 변사사건

○ **(후속조치 전담인력 배치)** 형소법 연계법령 개정 수요 발생 등 즉각적 대응을 위해 수사개혁 후속조치 전담 TF(전담인력) 운영

* (주요업무) △「형사소송법」 연계법령 개정 대응 △ 수사국장과 관련한 「해양경찰법」 개정소요 대응 △ 「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부령·훈령 개정소요 파악 대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사개혁 전담TF 및 전종인력 배치(1월), 수사업무량 분석(2월)
2분기	❖ 수사인력 확보 소요정원 대응(4월) 연구용역 추진(5월)
3분기	❖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9월)
4분기	❖ 경찰서 수사조직 재설계 및 경찰서 수사정원 재배치(12월)
연중	❖ 수사기관협의회 운영, 소요정원 대응을 위한 행안부·기재부 지속

현장 친화적	다. 해양경찰 조직체계 고도화	장비관리
	2.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추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과제목표]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공정률** ('21년) 사업 기반조성 → ('22년) 30%

□ 추진 배경

○ 부산정비창 정비업무 부하 및 대형함정 상가 시설 부재로 인한 해군 정비창 위탁 수리 지연 등으로 원활한 정비지원 한계, 서부정비창 신설 추진

✓ (규 모) 개발부지(2.3만평), 자연녹지(7천평), 건축(6.8천평)
* 사업기간 : '19 ~ '24 (6년)

✓ (총사업비)237,155백만 원
* 공사비 224,786백만원 부대경비 12,369백만원(감리비 7,039백만원 등)

【기술제안 설계 조감도】

□ 주요 내용

○ 본격적인 공사에 대응한 현장관리팀 및 행정지원팀 구성·운영

- (현장관리) 항만·토목·건축 등 복합공정 건설 사업으로 착공시기에 맞춰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투입 공정, 품질, 안전 등 관리
- (행정지원) 국회,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등 사업 관련 유관기관 대응 및 예산 편성·집행, 조직신설, 소요정원 확보 등 행정업무 전반

○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품질 확보 등 관리기능 강화

- (안전관리) 건설공사 관련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등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관리 책임·의무 강화, 전문 인력을 통한 현장관리
- (공정관리) '25년 개창 목표에 따른 1년차 사업계획 성과 달성을 위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CM) 대상 감독·점검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추진단 구성(1월)
2분기	❖ 사업 부지 매립 및 절토 토목공사 등 착공(착공식 6월 중)
3분기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1년차 공정 및 안전관리 현황 중간점검(9월)
4분기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연차별 예산편성, 1년차 사업 공정 및 성과 평가(12월)
연중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공정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서부정비창 조직 및 인력 확보 대응

현장 친화적	다. 해양경찰 조직체계 고도화	교통관제
	3. 「광역 관제센터」 신규도입을 위한 운영체계 확립	

[과제목표] 광역관제센터 운영 기본계획 마련

□ 추진 배경

○ 연안·항만 **개별로 운영되던 VTS**(5급/경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건물·행정인력 공동활용**, 연안~항만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교통관리** 추진

* ┌ 군산(5급), 군산연안(신설)을 통합, **(가칭)군산 광역VTS**(총경/4급) **신설**
└ 목포(5급), 진도연안(경정) 및 신안연안(신설)을 통합, **목포 광역VTS 신설**

○ (가칭) **'광역관제센터' 본격 운영**을 위해 **적정인력, 근무방식, 연속적 통항선박 관리 및 상황관리 체계 등 운영기준** 마련 필요

* '22년 군산 및 목포 광역관제센터 시범운영을 위한 소요정원(19명) 확보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운영기준 마련) **해외 선진국**(일본·캐나다) 및 **유사 관제기관**(항공·철도) 벤치마킹, 상황대응 체계 등 **국내환경에 적합한 운영기준(안) 마련**

* 적정 인력, 근무 방식, 연속적 통항선박 관리 및 상황관리 체계 등

○ (T/F구성·시범운영) 서해청 소속 **T/F팀 구성**, 관제운영·시설장비 등 **분야별 대응체계** 마련, 준공 및 **시범운영 후 본격운영** 추진('23~)

* 광역관제센터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센터장(4.5급) 확보 추진(행안부 협의)

목포 광역관제센터('19.10~'22.10 / 167억 / 레이더3)

군산 광역관제센터('19.10~'22.10 / 93억 / 레이더2)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광역VTS 개념 정립을 위한 현장의견 청취(1월~2월)
	❖ 광역VTS 운영기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월~3월)
	❖ 시험운영 인력 배치 및 준비(2월~3월)
2분기	❖ 통합센터장 직급상향 및 운영인력 확보 소요정원 대응(4월~7월)
3분기	❖ 광역VTS 운영기준 등 정립, 운영매뉴얼 작성, 준공 준비(10월)
4분기	❖ 광역VTS 시험운영 및 장비·건축물 등 점검

현장 친화적	다. 해양경찰 조직체계 고도화	방제기획
	4.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과제목표] **방제요원 역량 평가 이수율**('21년) 88.4% → ('22년) 90%

□ 추진 배경

○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방제 조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요원**의 **역량 제고 추진**

* 현업 부서 조기 정착, 유지문 분석 전문성 확보, 방제함정 전문 승조원 채용 등

○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호 및 화학사고 대응**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재난 관리 취약 분야 역량 확보**

* 국립공원공단과의 블루카본 등 해양생태계 보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사고 협업 추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22년부터 운영되는 **현업 부서***의 **조기 현장 정착** 및 **안정적 운영 추진**

* 현업 신설 부산 등 5개서 시범 운영(2월~4월) 중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 '유지문 분석 기능 개편' 후속 조치 시행으로 **분석 전문성 확보 지원**

* 지방청 분석계 전문 인력 배치 및 관련 규칙 개정 등 분석 기능 조기 정착 추진

○ **『방제요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방제요원 역량 계발 추진**

* 교육 일수 확대(6급, 2일→3일) 및 직급별 필수 역량 평가 과제 개발

○ **국립공원공단**과 갯벌 등 **블루카본 지역 환경 보호 협력 강화**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방제 인력 파견** 등 **사고 대응 협업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부산 등 5개 해양경찰서 현업부서 시범 운영(시범: 2월~4월)
	❖ 국립공원 등 관계기관 협업 추진(2월~12월)
	❖ 유지문 분석 기능 개편 후속 조치 지원
2분기	❖ 현업부서 운영 평가 및 정상 운영 추진(5월~12월)
4분기	❖ 방제요원 역량 강화 교육 과정 평가 분석(12월)
연중	❖ 방제요원 역량 강화 교육 과정 운영

현장 친화적	라.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	장비기획
	1. 해양환경·임무 특성을 고려한 장비도입 법제화 구축	

[과제목표] 법제화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장비도입 기틀 마련

□ 추진 배경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비도입업무(장비선정, 계약, 검수 등)에 대한 전문가 참여 확대 및 법제화를 통해 전문성, 투명성 제고

○ '해양경찰장비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관련 규칙 제·개정 필요

□ 세부내용

○ '해양경찰장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구 분	시 행 령	시행규칙
조 문	16개 조항	9개 조항
주요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절차 • 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 등	• 착·중도금 지급 기준·방법·절차 • 중요탑재장비 선정방법·절차 • 감독관 배치기준·방법 등

○ 법률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칙 제·개정

* 법령 관련 '착·중도금 지급 관련 규칙' 제정, '해양경찰 장비도입 업무규칙' 개정 등

○ 장비도입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추진방향, 재원확보, 제도의 수립 및 정비 등에 대한 기본계획(5년), 시행계획(매년) 수립하여 국회(상임위) 제출

* 효율적인 기본·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련부서 참여 전담 T/F 운영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하위법령 제정관련 관계부처 대응(2월)
2분기	❖ '해양경찰장비법' 하위법령 제정(4월) / 규칙 제·개정 계획 수립(4월)
3분기	❖ 장비도입 기본·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5~11월) / 규칙 제·개정(9월)
4분기	❖ 연구용역 최종보고(11월) / 장비도입 기본·시행계획 국회 제출(12월)
연중	❖ 하위법령 제정 및 규칙 제·개정 대응 및 장비도입 기본·시행계획 자료 검토

현장 친화적	라.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	기동방제
	2. 미래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목표] 해양오염방제 조치율 (5년 평균) 78.5% → ('22년) 80% 이상

□ 추진 배경

○ 탄소중립 정책 등 **해사환경변화**에 따른 **블루카본 보호 전략 필요**

○ **방제주체별 역할 강화**로 민·관·공공 **통합방제체계 고도화 추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블루카본*** 현황 조사, **방제시스템 반영 및 우선보호 방제전략 수립·시행**

* 해초, 염습지 및 갯벌 등 해양 생태계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

○ **민간방제자원***의 **긴급동원, 교육·훈련 및 경비지원, 사전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추진

* 방제업체, 예인선, 유류이적, 구난자원(잠수인력, 크레인) 등

○ **어선 방제보험제도*** **최초 도입·시행**('22. 1. 1)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으로 오염행위자 중심의 방제조치 강화**

* 어선재해 보험(수협) 기반, 어선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비용까지 보상범위 확대

○ **취약지 대응 강화를 위한 방제함정의 자기 주도적 운항체계 마련**

* ❶취약지역 분석·목적형 출동 ❷취약시간 임무수행 강화 ❸업무영역 확대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대비 **방제분야 안전관리방안 마련**

* ❶안전담당관 지정 ❷위험성 평가 ❸안전·보건 관리강화 ❹이행실태 점검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어선방제보험 지침마련(3월), 방제정 운항체계 개선(3월), 방제안전관리방안 수립(3월)
2분기	❖ 광역·지역방제실행계획 개정 및 블루카본 우선보호 전략 수립(5월)
3분기	❖ 방제안전관리 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이행여부 점검(6월, 12월)
4분기	❖ 블루카본 자원정보 조사 및 시스템(KOSPS, Pre-SCAT 등) 반영(9월)
연중	❖ 민간방제자원 관리·지원 등 근거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추진

현장 친화적	마.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장비 도입	방제기획
	1. 복합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다목적 방제함정 등 장비 확충	

[과제목표] **친환경 방제기자재 현장 배치** ('21년) 1종 → ('22년) 2종

□ 추진 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LNG 등) 추진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 해양사고**(폭발·화재 등 동반)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유류 오염 중심**의 **방제**에서 **복합오염 사고까지 활용 가능한 방제 장비 개발**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복합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다목적 화학방제함**(1,500톤급) **건조 사업 추진**

* ('21년) 예타 통과 → ('22년) 예산 확보 → ('23~'27년) 예산 반영 및 건조 추진

○ **첨단 기술**을 **적용 성능 향상** 및 **연구 개발된 방제기자재 현장 배치**

* 전동 유회수기 1대, 나노뜰채 200개 구입 현장 사용 의견 수렴하여 도입 확대

전동 자항식 유회수기

나노 자항식 유회수기

나노 뜰채

○ **방제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장비 대응 기술 연구개발 지속 추진**

연구개발(R&D) 사업 과제	'22년 계획
대규모 해안유입 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및 장비개발('19~'23년)	성과물 현장 실증 테스트
해상 유출 저유황유 오염 방제기술 및 장비개발('21~'23년)	성과물 현장 실증 테스트
웨어러블 기반 해상화재·화학사고 대응기술 개발('22~'25년)	연구기관 선정, 사업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해상방제대응 기술 개발('23~'26년)	'23년 신규 예산 확보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2년도 방제자원 확보 추진(1월) ❖ 해역별 방제자원 재배치(2월) ❖ 다목적 화학방제함 및 신규 연구개발사업 예산 반영 추진(2월) ❖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화학사고 대응 기술개발 추진(3월)
2분기	❖ 연구개발사업 성과물 현장 실증 테스트(5월) ❖ 친환경 LNG 방제함정 건조 관리(5월)
3분기	❖ 친환경 방제자원 확보 및 현장 배치(8월) ❖ 방제자원의 관리 디지털 관리체계 로드맵 수립(9월)
4분기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목표 수립(10월) ❖ 광역방제지원센터 자원 비축 현황 점검 및 안정성 평가(11월)

현장 친화적	마.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장비 도입	장비기획
	2.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장비 적기도입	

[과제목표] 신규사업(함정 27척, 헬기 1대) 계약 및 함정 17척, 대형헬기 1대 적기 배치

□ 추진 배경

○ 함정·항공기 등 현장대응 세력의 적기 배치를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 그린뉴딜과 탄소저감 등 정책연계 및 노후함정의 지속적인 대체건조

□ 세부내용

○ (함 정) '22년 사업대상(신규 27척, 진행 41척)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및 금년도 17척(200톤 4척, 연안구조정 13척) 현장배치

* 함정사업 예산 1,946억원 중 60%(1,168억원) 이상 상반기 집행

○ (항공기) 동일기종인 대형헬기 3, 4호기의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해 현지(美, 시콜스키 社) 동시 공정점검으로 예산, 시간 절감 및 효율성 증대

* 3호기 최종검사 前 현지 공정감독관 파견(4~7월)으로 적극적인 품질검사 활동

<'22년 함정·항공기사업 관리 현황>

구분	계	함정사업	계	항공사업
계	68	신규 27, 준공 17, 계속 24	5	신규 1 준공 1, 계속 3
신규 계약	27	3000톤 2, 500톤 1, 100톤 1 형기정 2(설계), 예인정 1, 방제정 1, 연안구조정 5 방탄정 2대, 고속단정 12대	1	중형 1
준공	17	200톤 4, 연안구조정 13	1	대형 1
계속	24	3000톤 3, 200톤 7, 형기정 6, 예인정 5, 방제정 3	3	대형 1, 중형 2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예인정 1척 건조 및 형기정 설계 계약의뢰(3월) / 중형헬기 1대 계약의뢰(3월)
2분기	❖ 200톤 경비정 준공 및 배치(6월) / 함정사업예산 60% 이상 집행(6월)
3분기	❖ 3000톤 경비함 2척 등 24척 계약의뢰(7~9월) / 대형헬기(3호기) 최종검사(7월)
4분기	❖ 연안구조정 13척 배치 완료(5~11월) / 대형헬기 1대 도입(11월)
연중	❖ 함정감독관 공정회의(현장점검, 화상회의 병행) 및 운용자 의견수렴

현장 친화적	마.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장비 도입	정보통신
	3. 주지휘망 전환을 통한 상황대응 역량 강화	

[과제목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률** ('21년) 22.7% → ('22년) 100%

□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 주관 해양경찰·소방·경찰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PS-LTE* 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21.3월 전국서비스)

* Public Safety - Long Term Evolution :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

○ **해양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재난안전통신망 필수 사용을 규정(재난안전법), **향상된 무선통신망으로의 지휘통신망 전환 예정**('22.11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조기 확보 및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종**으로 함정(파출장소) 등 현장직원 보급(현업부서 정원의 50% 이상 수준)

* (단말기) 총 6,104대 운용 예정<'20년 1,387대, '22년 4,717대 구매(60억)>

○ 단말기 제조업체의 현장 순회 및 사이버 교육 등 실습형 교육을 통해 **즉시 업무에 활용 가능한 상시 숙달 교육 체계 마련**

* 사이버 교육 개설, 동영상 교육자료 게시판 상시 게시,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 직원 관심 및 숙련도 제고를 위한 **재난망 우수 사용부서 인센티브 제공**

○ 육상(PS-LTE)·해상(LTE-M)망 음영구역 확인 시 보완 요청, 신조함정 등 함정 기지국 추가(22년, 4척) 구축 등 **해상음역 구역 상시 보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계획 수립 및 조달청 계약 의뢰(1월)
2분기	❖ 재난안전통신망 그룹 설정 등 운용 절차 수립(6월)
3분기	❖ 재난안전통신망 현장 배부 및 숙달교육 실시(8월), 운용계획 수립(9월)
4분기	❖ 해양경찰 주지휘망 전면 전환<LTE망 → 재난안전통신망신망>(11월)
연중	❖ 육상 및 해상 음영구역 발생 및 확인 시 행안부·해수부 보완 요청

현장 친화적	바. 현장 업무 시스템 고도화	관제기술
	1.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확대 설치	

[과제목표]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확대 설치로 해양사고 예방

□ 추진 배경

○ 대형 해양사고의 주범인 **음주운항 선박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한 **자동탐지 시스템 확대 설치**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VTS 도입에 발판을 마련한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기술력과 위상 증대**

* '21.12.8. 부터 목포항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 시범 설치·운영 중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주요내용)** 인공지능이 정확한 음주운항 선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선박항적 패턴을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정확도 향상**

- 인공지능이 판별한 음주운항 적합 여부를 **관제사의 평가·환류(지도학습) 및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시스템 지능 고도화 추진**
- VTS 관제구역 내 선박운항 특성, 시스템 설치현황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추가 설치 센터(3~5개소) 선정**

○ **(기대효과)** 실시간 음주운항 선박 감시·단속 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위험상황 파악 및 음주에 기인한 해양사고 감소**

- 인공지능의 관제업무 지원으로 **관제사 업무경감** 및 '음주운항은 적발된다'는 **인식개선을 통해 음주운항 감소 기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선(3월)
2분기	❖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운영성과 분석(6월)
3분기	❖ 음주운항 자동탐지 시스템 확대설치 센터 선정 및 추진(8월)
4분기	❖ VTS시스템 연계 및 시험운영 추진(11월)
연중	❖ 음주운항 자동탐지 인공지능 정확도 향상

현장 친화적	바. 현장 업무 시스템 고도화	빅데이터
	2. 해양경찰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추진	

[과제목표] ◈ 해양정보 관리체계 패러다임 전환 및 AI기반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 추진 배경

○ (전략적 정보관리) 데이터는 미래 중요 자원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정책 수립 등 각종 해양 정보를 입체적으로 관리·활용이 반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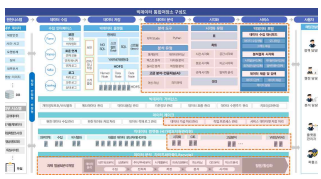
○ (데이터기반행정) 고품질의 대내·외 해양데이터 확보와 분석으로 현장 집행력 강화·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등을 통한 대국민 해양서비스 극대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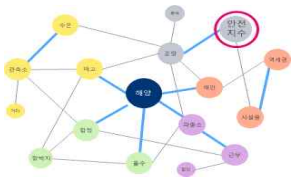
○ (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 중심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하여 의사결정 정보의 신뢰성 증대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속한 공유체계 기반마련

○ (체계적 데이터관리) 해양경찰 보유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하여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기준정보 체계 마련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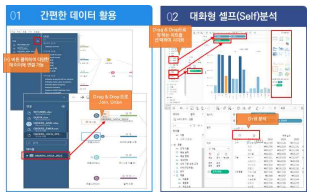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사업추진 내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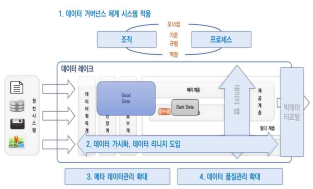
❶인프라(H/W, S/W) 고화



❷기준정보 체계수립



❸지능형 통계



❹데이터거버넌스 확산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1~3월) *사전협의(행안부)→보안성검토(국정원)→일상감사(감사담당관)→발주의뢰(조달청)→사전규격공고→본공고
2분기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조달계약 및 착수 보고(4월) ❖ 빅데이터 플랫폼 요구 분석(5월)
3분기	❖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6~7월)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8~9월)
4분기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0~11월)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보고(12월)
연중	❖ 대내·외 빅데이터 연계 및 기능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수요조사

현장 친화적	바. 현장 업무 시스템 고도화	교통관제
	3. 저탄소·친환경 Green 바닷길 운영	

[과제목표] **과속경보시스템 확대**('21년) 2개VTS →('22년) 6개VTS

□ 추진 배경

○ 해양사고 방지, 탄소저감·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해 **첨단 관제 시스템을 활용,『선박교통안전』과『해양환경보호』동반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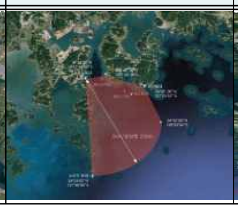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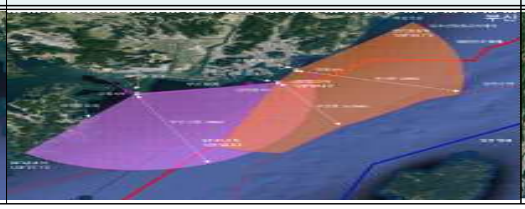
* (**과속경보시스템**) 부산VTS('20.12), 목포VTS('21.12) / (**저속운항프로그램**) 부산 등 5개소('20.1~)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과속경보) 부산·목포VTS에 시범운영 중인 **과속경보 시스템 활용, 과속운항 사전 차단,** 해양사고 방지 및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 (저속운항 프로그램) **탄소 저감**을 위해 **선박 입출항이 많은 5개** VTS에 저속운항 구역을 지정, **12노트↓로 운항시 항비**(15~30%) 감면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5개 VTS 】

인천	여수	부산 / 부산신항	울산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선박입출항이 많은 항만에 과속경보시스템 확대 검토(3월)
2분기	❖ 각종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6월)
3분기	❖ 과속경보시스템 확대(여수, 인천, 울산 / 9월)
4분기	❖ 과속경보시스템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성과 분석(12월)
연중	❖ 저속운항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선박간 안전관리

현장 친화적	바. 현장 업무 시스템 고도화	정보통신
	4.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과제목표] **개인정보 유출 사고** ('21년) 0건 → ('22년) 0건

□ 추진 배경

○ 우리 청 개인정보처리시스템(7종)*에서 총 213만건 개인정보 보유

* 어선 출·입항, 수상레저, 동력레저기구, 수상구조사, 연안체험, 민원포털, 유도선 운항관리시스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경로 및 침해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어 안전성 강화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개인정보 처리이력 점검과 교육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 개인정보처리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보관하는 관리솔루션('20.6월 도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이상유무 점검<월1회>

*접속지 정보(IP 등),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조회, 수정, 다운로드 등)

►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현황 점검<분기1회> 및 처리자 교육 실시<연1회>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해당 권한의 부여·수정·말소 내역 관리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요소를 점검·보완**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 패스워드 취약점, 데이터 평문 전송, 관리자 페이지 노출 등 점검

○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자가진단 용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 개인정보 수집 근거, 동의서 작성, 제3자·목적 외 제공,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3월), 체크리스트 제작·배포(3월)
2분기	❖ 개인정보보호 교육(5~6월), 소속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5월)
3분기	❖ 개인정보보호 이행실적 보고(7월), 차년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9월)
4분기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매뉴얼 개선(10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11월)
연중	❖ 개인정보 처리이력 점검(매월),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실태 점검(매분기)

현장 친화적	바. 현장 업무 시스템 고도화	관제기술
	5. 인공지능(AI) 기반 닻 끌림 경보시스템 개발	

[과제목표] **닻 끌림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경보시스템 개발·현장설치**

□ 추진 배경

○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관제업무 특성 상 **위험상황 발생 시 인지 지연 등 관제사의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 상존**

- **닻 끌림에 기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사에게 신속·정확한 경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사고사례) '13년 포항항, 화물선 A호 닻 끌림 사고로 11명 사망·실종 및 선박 침몰 피해 발생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주요내용)** 자체 기술력으로 **닻 끌림 자동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조기 인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닻 끌림 항적 특성을 **인공지능이 신속히 인지, 경보 제공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

○ **(기대효과)** 자동 닻 끌림 경보 표출 방식 도입으로 **관제사의 업무 피로도 감소** 및 **인적오류 저감으로 신속한 초동조치 가능**

시행 전	시행 후
○ 모든 정박선에 대해 관제사가 닻 끌림 경보 설정으로 업무 피로도 증가 ○ 관제사가 닻 끌림 인지 지연 및 누락 발생 가능	○ 모든 정박선에 대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닻 끌림 탐지하여 관제사 업무경감 ○ 인공지능이 정확한 닻 끌림 파악 및 경보제공으로 신속한 위험상황 인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닻 끌림 자동탐지 시스템 개발 착수(1월) ❖ 닻 끌림 사례 조사·수집(3월)
2분기	❖ 닻 끌림 선박 패턴 분석(4월)
3분기	❖ 닻 끌림 자동탐지 인공지능 개발(7월)
4분기	❖ VTS시스템 연계 및 시험운영 추진(10월) ❖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선(11월) ❖ 닻 끌림 자동탐지 시스템 정식 운영(12월)

현장 친화적	사. 현장 인력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수색구조
	1. 재난대비 및 체계적 교육훈련을 통한 구조·구급 역량 강화	

[과제목표] 자격·등급별 전문화 과정 등 구조·구급 교육과정 개선·운영

□ 추진 배경

○ **(수난대비 기본훈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합동훈련 재개, **내부 역량 향상** 및 유관기관·민간단체 참여를 통한 **수난구호 협업체계 고도화**

○ **(구조대원 역량강화)** 구조 교육 인프라 확충*에 따라 **구조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으로 구조 **전문성 확보**

* 중특단 훈련시설 완공('21.6월), 중특단 교관 증원(10→21명), 교육원 교수 증원(6→8명)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현장친화형 훈련)**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대상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친화적인 합동훈련을 재개***, 해양재난 대응능력 강화

* '22. 5월 중 본청 주관 훈련 및 소속기관 별 반기(광역)·분기(지역) 단위 개최

○ **(수난구호 협업강화)** 수난구호 **협력기관·민간단체 등과 협업체계 강화** 및 **지자체 임무(비용지급, 선체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 **내실 있는 훈련 설계**

○ **(구조역량 관리)** 교육원·중특단 **구조 교육과정 개편·운영** 및 현장부서 구조훈련 개선, **구조대원 등급제 연계**를 통한 자발적 역량관리 체계 확립

* 구조 등급별(2급·1급·마스터) 과정 신설, 구조경진대회 참여대상 확대 개최 추진 등

○ **(구급교육 강화)** **응급구조사 자격유무 및 보유자격별 교육과정 도입** 등 전문성 유지·강화가 가능한 **연속성 있는 교육체계** (초·중·고급) **정립**

* 구급직별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 개설, 상황요원·일반 직원 교육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2년 수난대비 기본훈련 계획 및 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수립(2월)
2분기	❖ 구조경진대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4월)
3분기	❖ 구조경진대회 지방청별 예선(7월), 세부계획 수립(8월) 및 대회 개최(9월)
4분기	❖ '22년 수난대비 기본훈련 운영 성과 분석(12월)
연중	❖ 교육원·중특단 주관 구조·구급 교육과정 운영(3~10월)

현장 친화적	사. 현장 인력 중심의 전문성 제고	인 사
	2.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관리 체계 추진	

[과제목표] 직무능력표준 ('21년) 보직기준 마련 → ('22년) 현장부서장 인력풀 관리

□ 추진 배경

○ 다양한 분야의 경력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인력관리 개선**방안 추진

○ **해양경찰 직무능력표준('20년)을 활용**하여 현장부서장에 대한 기준 체계 마련 등 **현장친화적 인력풀 관리** 추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직별 신설)** 기존 직별 외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전문분야 인력의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별도 직별 신설*** **및 관리****

* 외국어, VTS, 장비(드론·조선·함정정비) 분야 직별 신설(인사운영규칙 개정)

** (직별 재조정) 전문분야 관리전담부서에서 신설 직별에 대한 자격설정 부여 및 관리방안 마련(직별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한 전문성 유지 등)

○ **(교류 인사)** 소속기관별 전문분야 필요인력의 충원률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분야 직별 간 교류인사 제도화*** 추진

* 전문분야 전담관리부서는 교류인사 시 동일 직별 간 교류인사(안)을 작성하여 인사부서 통보 → 인사부서는 직별별 교류인사(안) 통합 검토·의결

○ **(현장부서장 인력관리) 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주요 **현장부서장(파출소장·상황실장·구조대장·항공대장·특공대장 등)의 보직기준** 마련·**인력풀 구성·관리**

* 직위·수준별 직무능력표준화(지식·태도·자격 등)로 역량평가 등의 활용을 위해 개발('20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전문인력 관리 및 현장부서장 직무능력표준 활용 관련 기능별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3월)
2분기	❖ 전문인력 직별신설 추진 기본계획·현장부서장 보직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4월)
3분기	❖ 본청 현안실무회의 등을 통한 최종계획 수립(6월) 및 인사관계법령 개정 추진(7월)
4분기	❖ 인사관계법령 개정 대응 및 개정(~12월)
연중	❖ 전문인력 관리 및 직무능력표준 활성화 관련, 의견수렴 및 현황 분석(계속)

현장 친화적	사. 현장 인력 중심의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3.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정착 및 우수인재 양성 교육훈련 강화	

[과제목표] √ **사이버콘텐츠 과정 확대 운영** ('21년) 300차 → ('22년) 350차 이상
√ **직무역량 평가** ('21년) 함정장, 파출소장→('22년) 구조항공대장, VTS센터장 등 확대

□ 추진 배경

○ **다양한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교육환경 정착**으로 조직·개인 역량 강화

○ **현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강화**로 역량 중심 인적자원 관리 체계 확립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사이버교육, 표준교과서 등 **교육 콘텐츠 개선 및 상시학습제도 내실화**

* 사이버 콘텐츠 신규 제작(소요예산 8천만원) / e-book 제작(15종, 소요예산 2천만원)

○ **국외 교육훈련 확대 추진** 및 훈련과제 조기선정 등 관리 체계화

* 기존 USCG 1개 기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IMO 등 2개 기관 이상 확대 추진

○ 경찰관 **직장훈련(체력검정·구조역량·사격훈련) 평가 강화**

* (체력) 평가등급 상향 조정, (구조) 관서별 자체교육, (사격) 전문과정 개설

○ 교육수요 변화를 대비한 **교육원 신임·재직자 교육운영 개선**

* (신임과정) 교육기간 확대, 현장 대응력 강화 중심 실습교육 및 자격증 교육 강화
(기본과정) 기존 사이버교육 1주 → 집합교육으로 전환, 직무 전문 및 리더십 교육 강화

○ 현장부서 대상 **종합 직무역량평가 확대 및 강화**

* 기존 함정장·파출소장에서 구조대장·VTS센터장·항공대장 등으로 확대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현장부서 직무역량평가 확대를 위한 관련 기능 협의 ❖ '22년 국외훈련 운영 계획 수립 및 훈련과제 수요조사
2분기	❖ 국외훈련(비영어권) 대상자 선발 / 사이버 콘텐츠 제작 ❖ 경찰관 직장훈련(체력검정, 사격훈련) 실시 / 사격역량강화 교육 운영(상반기)
3분기	❖ 현장부서 직무역량평가 추진계획 수립 ❖ 경찰관 직장훈련(구조역량, 사격훈련) 실시
4분기	❖ 국외훈련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 표준교과서 개정 ❖ '23년 상시학습·직장훈련 지침 수립 / 사격역량강화 교육 운영(하반기)
연중	❖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 운영 ❖ 국외훈련 직무훈련기관(일본 해보청, IMO 등) 발굴

현장 친화적	사. 현장 인력 중심의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4.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체계 내실화	

[과제목표] ('21년) 해양경찰 훈련체계 고도화→('22년) 해양경찰 **훈련 총량제 및 조정기능 강화**

□ 추진 배경

○ 훈련 총량제 준수 등 **훈련 총괄부서 관리역할 강화**로 체계적 관리

○ **현장수용도를 반영한 훈련체계** 마련으로 **현장부서 대응력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유사·중복 훈련 방지를 위한 훈련 총괄부서의 **사전 조정기능 강화**

* (기존) 기능의 임의적 훈련 신설 → (개선) 교육훈련계와 협의 후 신설

○ **현장부서**(함정·파출소) 전문화를 위한 **훈련**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

* (기존) 함정-경비과 / 파출소-해양안전과 → (개선) 기획운영과 총괄 및 기능별 협의

○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파출소 전입자의 신속한 업무숙지를 위해 **파출소 팀웍 훈련 신설**·지원

< 파출소 팀웍 훈련 >

종 목	시간(h)
연안구조정 운용술	2
지형지물 숙달훈련	1
지역특성화 훈련	1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불시·도상훈련이 되도록 **시행주기 조정**

< 훈련 시행주기 개선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도상훈련	분기 3회	분기 1회
불시훈련	반기 1회	분기 1회

○ 경찰서별 **현장 대응역량**을 **평가·선발**하는 **도상훈련 경진대회*** 추진

* 지방청별 경찰서 도상훈련 평가(예선 병행) 실시 후, 본청에서 본선 심사·선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파출소 팀워크 훈련 신설(시행) 및 훈련 관리체계 일원화
2분기	❖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규칙」 개정 및 지방청 훈련협의회 신설
3분기	❖ 상황판단 역량 제고를 위한 도상훈련 경진 대회 실시
4분기	❖ 도상훈련 경진대회 결과를 반영, 우수 함정·파출소 평가·선발
연중	❖ 도상훈련(월 1회→분기 1회) 및 불시훈련(반기 1회→분기 1회) 시행주기 개선

현장 친화적	사. 현장 인력 중심의 전문성 제고	수사기획
	5. 수사관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수사교육 강화	

[과제목표] 생애주기형 교육으로 수사교육인원 '21년 567명 → '22년 800명(41%↑)

□ 추진 배경

○ **(수사전문성 확보 필요)**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 도제식 교육으로는 개편된 사법절차에 맞는 해양수사 전문성 확보 곤란

* 교육원에서 강의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실제 사건현장에서 교육 활용도 저하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생애주기형 교육)** 수사경과 진입 시부터 수사과장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인별「**생애주기별**」**맞춤형 교육**으로 우수한 수사간부 육성

* 주요내용

▮ 희망자 대상 교육이 아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수교육으로 진행

▮ 단계별 교육과정 완료 시, 그 직무(반원→반장→계장→과장)를 수행 목표

○ **(체계적 교육 분담)** 우리청 수사철학이 수사교육으로 일관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본청·교육원(수사연수소)·지방청에서 역할 분담

** 관서별 수사교육 방법

▮**(본 청)** 수사교육 기본계획 수립, 수사연수소 교육 관리·운영

▮**(수사연수소)** 수사간부, 수사심화과정, 지방청 수사교관 육성과정 교육

▮**(지방청)** 수사전담요원 과정, 수사기초 과정, 지역특화 수사과정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사교육 기본계획 수립(2월) 수사과장·계장 교육(2월), 생애주기형 운영인력 교육(3월)
2분기	❖ 수사전담요원 체험형 교육 실시(5월)
3분기	❖ 수사기초과정 교육(7월), 지역특화 수사과정 교육(9월)
4분기	❖ 생애주기형 교육운영 성과 분석(11월)
연중	❖ 수사연수소 주관 전문교육 실시

국민 친화적 행정

(People-Friendly Administration)

국민 친화적	가. 국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제공	형 사
	1. 민생침해안전저해 사범 단속강화 및 현장 대응력 제고	

[과제목표] 현장 단속강화 및 성과·대책공유(년 2회↑), 형기정 인력·예산 대응

□ 추진 배경

○ **(민생침해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질적 인권침해범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저해행위, 해양비리 지능화 등 강력한 대응 필요

○ **(현장 대응력)**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맞추어 현장의 최접점에서 해상형사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형사2계(형기정) 역량 제고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기획단속) 민생침해·해양안전저해 등 시기별·테마별 집중단속**

- 관계기관 정보교류 확대를 통한 첩보수집 및 합동단속 등 대응력 강화

* (본청) 단속기획 → (지방청 중심) 단속활동 → (본청) 수사지도·환류

○ **(역할강화) 특별단속 성과 분석을 통한 국민불편 사항 제도개선**

-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역할 강화

○ **(임무강화) 형사2계 운영 내실화 및 차세대 형기정 도입 추진**

- 형사2계 역할강화를 위한 의경 대체인력(11척, +44명) 증원배치 및 치안수요 분석, 증톤 대체 형사기동정(100톤 2척) 전국 재배치 추진
- 해상 전문 형사활동 임무수행에 적합한(누구나 조종, 즉시 출동) 차세대 소형(10톤급) 형기정(총6척, 92억) 년도별 도입예산 확보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년간 기획단속 계획 수립(2월), 형사2계 증원인력 배치 등 운영지침 하달(3월)
2분기	❖ 민생침해, 해양안전저해사범 등 특별단속 실시(~6월), 차세대 형사기동정 4척 도입 예산 대응(~6월)
3분기	❖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단속성과 분석·환류(7월)
4분기	❖ 형사기동정 전국 재배치 검토(11월)
연중	❖ 단속성과 분석·환류, '23년 형사기동정 소요정원(4척 12명) 및 예산 대응

국민 친화적	가. 국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제공	형 사
	2. 생계형 범죄 현장계도 형사활동 등 국민 친화적 법집행	

[과제목표] 특별단속 사전 예고제(년 4회이상) 및 현장계도·경미범죄심사 (3%↑)

□ 추진 배경

○ **(민생정책)**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부양 등 차기 정부 초기 새로운 국정 과제 추진의 국민체감을 위해 부처별 역할 요구 예상

○ **(환경변화)** 바닷길 통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일반인도 SNS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최근 환경 등 국민 불안감 고조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영세어민 보호) 단속 사전예고제, 생계형 경미범죄 현장계도 강화**

- 특별단속 기획 時, 관내 어촌계·수협 사전 단속 예고제 시행 및 홍보를 통해 안전검사 미수검 등 부주의로 인한 범죄발생 예방

- 현장 계도중심 단속활동 및 『경미범죄 심사제』 활용, 국민권리 구제

* 특별단속 시 현장계도 실적 분석, 우수관서 독려 및 현장 지도점검(년2회)

○ **(마약범죄 대응) 국민 생활 속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수사 인프라 강화**

- 동해 · 제주청 마약수사반 신설 등 마약수사대(반) 보강 및 마약 탐지 장비·개인 보호장구 등 장비·예산 확보

* '22년 마약수사반 4명 증원(동해2·제주2) 및 관련 예산증액(총 1억원) 추진

- 경찰청·美 DEA 등 선진 수사기법 습득을 위한 마약수사 전문교육 확대 및 UNODC 등 국제회의 확대(2→6회), 대외 공조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경미범죄 심사운영 분석(2월), 동해·제주청 마약수사반 신설(3월)
2분기	❖ 마약 간이시약·개인보호장구 및 지방청 마약류 탐지장비 도입(6월)
3분기	❖ 상반기 경미범죄 심사운영 분석 및 환류(8월)
4분기	❖ 수사기법 습득을 위한 마약수사 전문교육(10월)
연중	❖ 특별단속 기획 및 단속홍보제 실시, '23년 마약류 소요정원·예산 확보 추진

국민 친화적	가. 국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제공	경 비
	3. 조업질서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다각도 대응	

[과제목표] **불법조업 외국어선 퇴거율** ('21년) 9,788척 → ('22년) 9,984척

□ 추진 배경

○ 서해 NLL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은 **지속 증가***, 기상악화시 집단침범·고속선외기 보트 활용 등 **불법 형태**도 **다변화 추세**

* 서해 NLL 외국어선 출현(일평균) : 44척('19년) → 51척('20년) → 71척('21.11월)

○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엄정한 단속활동**과 **해역별 대응전략 수립, 정부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외교적 노력** 등 **다각도 대응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조업 위험도**에 따라 **해역별·시기별 위험등급**을 **지정***, **고위험시기 전** 함정 **선제적 배치** 등 전략적 대응

* (등급) A~C 3등급 / (분류기준) 외국어선 출현척수, 집단침범 횟수 등 종합

○ **해역별 불법조업 양상**을 **분석**하여 **해역별 특화된 대응전략** 수립(1월) 및 해수부·해군·해경 간 **불법조업 정보 공유, 합동단속 추진**(7월)

○ **한·중 해경** 간 **불법조업 정보제공** 및 **직접인계**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조업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국정부 자정노력 촉구**(11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2년 불법 외국어선 단속대책(1월)
2분기	❖ 꽃게 성어기 대비 특별단속 대책(4월)
3분기	❖ 해경-해수부 합동 순찰(7월), 상반기 분석 및 하반기 대응계획(7월) ❖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9월)
4분기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11월)

국민 친화적	가. 국민 밀착형 현장 서비스 제공	오염예방
	4. 국민이 체감하는 항만미세먼지 저감 추진	

[과제목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점검율 28%↑(`21년) 467척 → (`22년) 600척

□ 추진 배경

○ 국제협약(MARPOL)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3.5→0.5%) 강화

* (20년) 외국적 선박 → (21년) 정기검사 대상선박 → (22년) 모든 선박 적용

○ 정부의 항만지역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목표('22년까지 50% 감축)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항만사업장 관리 강화 추진

* 16년 34,260톤 → 22년 16,000톤(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의결, 19.6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점검 목표 관리제 시행**

- '22년 황 함유량 기준강화에 따라 선박 연료유 적정 여부 점검 확대

* (20년) 324척→(21년) 467척(44%↑)→**(22년) 600척(28%↑)** / 25년 이후 1,200척

- 황 분석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연구센터, KOLAS)으로 **국제 공신력 확보**

* MARPOL 부속서6 "ISO 17025 기준적합 인증", 한국석유관리원 위탁→연구센터 분석

- **전 해경서 휴대용 황분석기 보급 확대**로 점검역량 강화

* 20년 3대(부산, 울산, 인천)→21년 6대(여수 등 6개소)→**22년 11대(전 해경서)**

○ **비산먼지 발생 항만 사업장 관리 강화**

- 미등록 하역시설의 해양시설 등록 추진, **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

- 항만대기질 규제 강화에 따른 **하역시설 미세먼지 억제설비 점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중점점검(1~3월)
2분기	❖ 휴대용 황분석기 구입(11대), 전해경서 보급
3분기	❖ 황분석 국제공인 인증(KOLAS) 취득 ❖ 하역시설 미세먼지 억제설비 점검
4분기	❖ 제4차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연료유 점검 및 홍보
연중	❖ 선박 출입검사 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지속 점검

국민 친화적	나.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수색구조
	1. 민·관 구조협력 체계 고도화 및 국제수색구조 협력 증진	

[과제목표 1] **민간해양구조대 교육훈련 강화** ('21년) 5,228명 → ('22년) 7,842명(전년比 50%↑)
[과제목표 2] **국제기구 주관평가(IMO/ICAO) 평가 이행률 90% 달성**

□ 추진 배경

○ **최근 민간구조 참여 증가** 등 **양적성장에 맞춰** 민간자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로 **정예·내실화** 등 **국민친화적 구조협력 체계 고도화**

○ 우리 주변해역 **공해상 해양사고 시** 보다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와 SAR **역량평가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국제수색구조 협력 증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민간구조자원 상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민간동원 효율화**

* ① 민간해양구조대 상황관리센터 신설, ② 관리시스템(앱) 전국 확대 및 고도화, ③ V-PASS상 민간해양구조대 선박 별도표기 등 민간자원 운용 효율화

○ **전문교육*** **강화와 훈련체계 정립**** **통한 민간구조 전문가 양성**

* ① 민간 관리자과정, ② 법정교육(10시간) 강화, ③ 표준교과 개편(특화과목)

** ① 합동훈련 강화(수난대비훈련, 구조대·거점파출소 훈련) ② 응소훈련(시스템)

○ **서프구조대 확대 신설**('21. 속초 → '22. 부산·포항), **민간구조대회** 추진 등 **민간 구조자원 파트너십*** **확장으로 구조 사각지대 최소화**

* 사회적 기업과 시민단체 등 협력다양화 및 구조협회 역량강화 지원(무상대부 등)

○ **우리 주변해역 공해상 사고대응 체계 개선*** **및 국제 SAR 역량****강화**

* 신고강화(선원교육, 선사협력), 주변국과 통신훈련 강화(年 1회 → 분기 1회)

** 국제기구(IMO/ICAO) 평가대응 및 국제 민간단체(USCG Aux. 등) 협력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민간해양구조대 전문강사 채용 및 관리자 과정 운영(1~4월)
2분기	❖ 서프구조대 확대 신설(부산, 포항) 및 민간구조경진대회 개최(6월~) ❖ 민간경상보조 사업(피복, 교육, 보험), 국제 SAR회의·훈련 추진(3월~)
3분기	❖ 민간구조자원 상시 관리체계(상황센터, 시스템 고도화 등) 구축(~9월) ❖ 국제해양구조연맹, USCG Aux. 등 국제 민간단체와 협력 강화(7~10월)
4분기	❖ 구조협회(무상대부 등) 역량 강화 및 IMO/ICAO 평가 대응(~12월)
연중	❖ 민간해양구조대 전문가 양성, 공해상 해양사고 상황대응 체계 개선

국민 친화적	나.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기동방제
	2. 민·관 협업 기반 복합 해양사고 전문역량 강화	

[과제목표] 민·관·공공 협의체 구성 : ('21년) 1개소 → ('22년) 4개소 이상

□ 추진 배경

○ 위험·유해물질(HNS)의 폭발·화재 등 복합사고 대응역량 강화 필요

* 해상 위험유해물질(HNS) 폭발·화재사고 시 대응세력은 국가(해경)가 유일

○ 복합해양사고 대응강화를 위해 민간자원 활용 및 민·관 협력 확대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기름·HNS 등 물동량이 많은 주요항만*에 복합사고 대응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협의체 구축·운영

* (6개 항만) ❶울산항 ❷부산항 ❸여수·광양항 ❹인천항 ❺대산항 ❻평택·당진항

▮(협 의 체) 해경·소방·해수청·항만공사·공단·예선협회 등 민·관·공공분야
▮(대상지정) 선박 폭발·화재사고 대응이 가능한 예인선 등 참여선박 지정
▮(자재비치) 내알콜포 등 화학물질 화재진화에 효과적인 소화약제 비치·대응

○ 악천후·화재 시 긴급방제를 위한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 (비상예인) 고출력(5,000HP↑)·대양용(3,000HP↑) 민간예인선 현황 조사 및 긴급동원체계 운영

* (선박화재) 자선(일반선박 등) 및 해경·소방 등의 타선 소화능력(펌프용량 등) 조사·활용

○ 복합 해양사고 역량 향상을 위한 민·관 교류 활성화 추진

* (학술발표) 긴급구난 및 HNS 분야 전문가 초청, 학술발표회(학회 특별세션 등) 운영

* (워 크 숍) 해경·공단 간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민간예인선 현황 조사 및 동원체계 운영(3월)
2분기	❖ 선박화재 대응 소화능력 등 조사·활용(6월), 민·관 공동협의체 구성·운영(6월)
3분기	❖ 해경·공단 간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9월)
4분기	❖ 긴급구난 및 HNS 분야 전문가 초청, 학술발표회(5월, 11월)
연중	❖ 내알콜포 등 화재진화에 효과적인 소화약제 등 자재 확충

국민 친화적	나.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오염예방
	3.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저감 협력 체계 구축	

[과제목표] 해양쓰레기 수거량 5%↑ (`21년) 388톤 → (`22년) 407톤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만톤(플라스틱류 7만여톤)으로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는 전체 해양사고의 13% 차지, 국민 피해 증대

* 국민들은 우리청 해양환경업무 중 해양쓰레기 줄이기(81%)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제함정·항공기 등 가용 인프라 활용 수거지원 및 NGO·사회적기업 등과 협업 강화로 **우리 청 역할 정립**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우리청 역할 정립**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 및 괭생이모자반, 적조 등 발생 시 함정(방제정)·항공기·무인기 이용 **선제적 예찰·수거 적극 지원**
- 선박, 항·포구 등 해양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및 인식개선 홍보**
- **무인비행기 활용**, 해양쓰레기 사각지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블루카본 보호구역 및 도서 해양쓰레기 분포도(SCAT) 작성, 지자체 등과 공유

○ **사회적가치(ESG) 실현 기업·NGO와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

- NGO·민간기업·홍보전문가 등 협업, **해양환경보전 캠페인** 추진

* 포스코건설「사랑海 바다SEA」캠페인, SK이노베이션「산해진미」플로깅 등

- 사회적기업 등과 협업, 폐플라스틱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프로젝트 활성화 및 방제물품 등 개발사업 지원**

* 업사이클링 원사 활용, 명예감시원 조끼·유흡착재·기름 넘침 방지팩 등 제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갯벌·습지 등 블루카본 보호 기본계획 수립
2분기	❖ 바다의 날 기념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 전개
3분기	❖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정화활동
연중	❖ 대규모 해양유입 쓰레기 해상수거 지원, 무인비행기 활용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국민 친화적	나.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교육훈련
	4.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산·학·연 업무협약 확대	

[과제목표] **시험방법** ('21년) 평가 항목 추가 → ('22년) 평가체계(시험·체력·응시자격) 질적 개선
업무협약 확대 ('21년) 건국대·경남대 → ('22년) 권역별 업무협약 확대

□ 추진 배경

○ 채용인력 감소 등 **채용환경에 부합**하는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해양경찰학 학문적 발전**과 **산·학·연 교류 확대**로 우수인재 인력풀 확보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채용시험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개선**

* (5급 공채 시험방법) 필기시험 →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공채 과목) (도입) 한국사·영어 검정제 및 헌법과목<선택> (폐지) 주관식<간후> 및 고교과목<순경>

○ 양성평등정책에 기반한 **체력검사 종목 추가 및 평가방식 개선**

* 체력 강화를 위해 좌우악력 추가, 5개 종목 시행 및 팔굽혀펴기 남녀자세 동일 변경

○ 채용인력 감소 대응을 위한 **경력채용 영입 확대**

* (軍) 함정요원(해군경력자, 2년) 응시자격 부사관에서 임기제 부사관 포함 확대

(學) 해경학과 경채 계급 일부 상향(경장) 및 해·수산 고교 학교장 추천자 10명 채용

○ 무도 유단자 응시기회 확대를 위한 **무도분야 가산 자격증 배점 상향**

* (현행) 4단 이상(2점), 3~2단(1점) → (변경) 4단 이상(3점), 3단(2점), 2~1단(1점)

○ 해양경찰 적합한 인력풀 확보를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 확대**

* '21년 건국대, 경남대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2년 권역별 업무협약 확대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채용관계 법령(예규) 개정(가산 자격증 배점표 개정)
2분기	❖ 상반기 채용시험 집행(함정요원 자격 확대) ❖ 채용관계 법령(대령, 부령) 개정(5급 경채 시험방법 및 체력검사 평가표 개정)
3분기	❖ 하반기 채용시험 집행(개편된 공채과목 시행 및 해·수산분야 채용) ❖ 채용관계 법령(예규) 개정(체력검사 평가방법)
4분기	❖ 하반기 채용시험 집행(개편된 공채과목 시행 및 해·수산분야 채용)
연중	❖ 산·학·연 업무협약 추진

국민 친화적	나.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방제기획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간 협력 강화	

[과제목표] **글로벌 전문가 소통 협력 지수** ('21년) 93% → ('22년) 94%

□ 추진 배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해사환경 연료유 다변화

○ 선제적인 대비·대응을 위하여 국가 간 협력 선도, 국내 정책 반영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상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과제 추진**

- 한·중·일·러(NOWPAP MERRAC) 간 오염 사고 대비·대응 협력 강화
- NPCGF 의장국 수행('12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주도('22년 한국 개최)
- 국제해사기구 오염방지전문위원회 의제대응 및 신규워킹그룹 참여('22.4월)

○ **국제 교류를 통해 선진 방제기술 협력 및 지원 강화**

- 한국-일본 간 방제 정책 교류회의 개최('22.12월), 재난형 해양오염 협력 추진
- 한국-베트남 간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추진으로 국제 협력 다변화

○ **국제 해사 이슈에 대한 신속한 국내 환류로 방제 전문성 강화**

- HNS협약 발효 대비 저인화점 연료유(LNG, 수소) 사고 대응 역량 확보
- 세계 3대 기름오염학회(네덜란드, '22.6월)에서 국내 방제 정책 발표, 정보 수집
- 국제전문가(ITOPF) 방제 전문교육, 교육원 정규 교육 과정 추진('22.11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 개최(3월)
2분기	❖ IMO 해양오염 대비·대응 전문위원회 참석(4월) ❖ NPCGF 전문가회의(위기대응그룹) 참석(4월)
3분기	❖ NOWPAP 국가방제책임기관회의(7월)
4분기	❖ 해경-ITOPF 합동 방제전문가 교육과정 실시(11월) ❖ 한-일 방제정책 교류회의(12월)
연중	❖ 방제기술아카데미, 방제국 소식지 공유

국민 친화적	나.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장비기획
	6.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민참여 플랫폼 강화	

[과제목표] 국제해양·안전대전' 행사, 장비기술 아카데미, 해경·해군 군수협업회의 개최

□ 추진 배경

○ 해양안전문화 저변 확산과 조선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 참여 활성화

○ '2022 국제 해양안전대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産·學·硏 등 대내외 유관기관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

□ 세부내용

○ 제6회 '2022 국제 해양·안전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철저

* 해양·안전장비 참여업체 홍보, 수출상담, 학술대회 및 각종 부대행사 발굴 등

○ 미래 기술변화 적극 대응을 위한 民·官 교류협력 활성화

행 사 명	개최시기	주 요 내 용
제3회 차세대 함정발전 학술대회	6월	• '국제 해양·안전대전'과 연계하여 전문가 참여 확대 • 신장비·기술 및 장비관련 정책 등 연구활동 정례화
제3회 함정설계 공모전	10월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대상 확대(1회 10팀, 2회 7팀) • 새롭게 도입하는 함정의 개념설계 및 아이디어 발굴
해경·해군 장비기술 (군수)협업회의	6, 11월	• 兩 기관 현장 협력과제 발굴 등 실효성 강화 • 정례회의 이외의 주제별 담당자 회의체 운영
유관기관 업무협력	수시	• KR, KOMERI 등 MOU 체결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업무지원, 연구사업 등 발굴
장비기술 아카데미	반기	• 産·學·硏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기술 강연 • 첨단장비, 친환경기술 등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 계획 수립(1월) / 컨퍼런스, 설계공모전 계획 수립(3월)
2분기	❖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 행사 개최(6월) / 상반기 장비기술 아카데미(6월)
3분기	❖ 설계공모전 응모작품 접수·심사(9월) / 유관기관(KR 등) 협업회의(9월)
4분기	❖ 해경·해군 군수협업회의(11월) / 하반기 장비기술 아카데미(11월)
연중	❖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준비 및 전문가 및 유관기관 업무회의 수시 개최

국민 친화적	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빅데이터
	1.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과제목표] ◈ 국민 친화적 해양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제 추진(2건이상)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 53개(~'20)→137개('21)→**211개('22, 65%↑)**

□ 추진 배경

○ (해양서비스 극대화)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인 대국민 해양 정책을 수립하여 업무 혁신 및 新가치 창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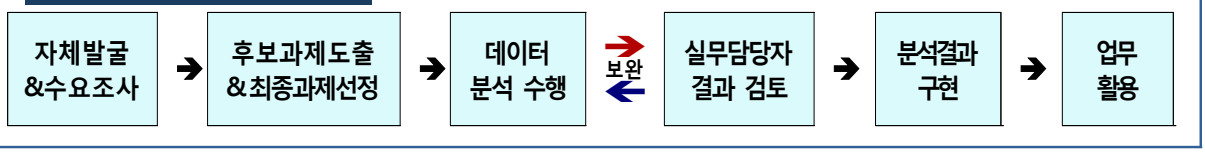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 개방확대) 공공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하여 문제점 진단 및 정책 개선에 환류하여 대국민의 해양경찰 대국민 만족도 제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란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분석과제 발굴·분석) 현장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실무중심의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과 전문위원회를 통한 과제 선정 및 빅데이터 분석·정책연계 추진

【분석과제 추진절차】



○ (중점데이터 개방확대) 주요 중점개방 4대 분야(교통·수상레저·해양오염·안전) 데이터 개방 강화 및 원시데이터(가공처리 되지 않은) 개방추진

* 중점개방분야 : 해양안전분야(22년) → 수상레저분야('23년) → 해상교통·해양오염 분야(24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1월) ❖ 빅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3월)
2분기	❖ 분석과제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데이터 현황조사(4월) ❖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위원회 개최 및 과제선정(5월)
3분기	❖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6~9월)
4분기	❖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구현(10월) 및 최종 결과보고(11월) ❖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점검(11~12월)

국민 친화적	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수색구조
	2.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 응급체계 구축	

[과제목표]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도입 등 차세대 해양 응급의료체계 구축

□ 추진 배경

○ **해양 응급환자의 증가추세**와 이에 따른 **구급 직별 인력 확충** 상황을 고려,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 **구급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해양 응급환자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인력 중심에서 IOT,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해양 응급의료체계 구축**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운영체계 개선)** 해양 응급환자에 대한 **국민 친화적 구급체계 마련** 및 구급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급 발전계획* 수립·시행**

* 지방청 구급 행정 인력 배치 및 닥터 경비함정 확대운영 등 구급대 도입 검토

○ **(제도 정비)** 구급활동 및 구급대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한 **수상구조법,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등 개정**

(단기) 全 구급세력에 적용되도록 수상구조법령, 행정규칙 개정

(중·장기) 해양 구급법(안) 제정*을 통해 구급대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21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관 법령제정 및 입법소요 연구용역결과 신규제정 필요 의견

○ **(첨단 장비 도입)** 대응세력별 필수보유 장비 기준 마련,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확대 도입 및 **R&D를 통한 첨단 EMS 장비 도입 검토**

* 우리 청 및 타 기관 R&D 우수사례 검토를 통한 장비 개선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구급발전 종합계획 수립(3월)
2분기	❖ 구급대 등 시범운영(4~9월), 구급장비 기준 정립(5월)
3분기	❖ 닥터 경비함정 확대 운영(7월)
4분기	❖ 구급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11월)
연중	❖ 첨단 구급장비 현황 파악 및 도입 검토(2~11월)

국민 친화적	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교통관제
	3. 운항자 친화적 선박교통관제 정책 추진	

[과제목표] 운항자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선박교통안전리포터 활성화

□ 추진 배경

○ **(운항자 교육 미흡)** 선박소유자의 자발적인 VTS 교육*은 **실효성이 낮아**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한 **국가주도의 교육 여건 조성** 필요

* 선박교통관제법 제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의무이나,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사항 無

○ **(VTS 민간참여 부족)** 신속한 해상위험요소 발견 등 **관제사의 상황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운항자로 구성된 민간세력 활용** 필요

* '12년부터 "선박교통통신원"을 발족했으나 운영·지원체계 미비로 최근 실적 全無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온라인 교육)** 장시간 집합·비용 발생 등 **선주·선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영상·플래시 형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사에 제공**

* 관제절차 등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자료를 우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

○ **(선박교통안전리포터)** 민간해양구조대 등 **벤치마킹**하여 **운영·자격·교육체계 등 마련, VTS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세력 활성화**

* 운영지침 제정 후 기존 선박교통통신원 명칭 변경, 조직 정비 및 확대 개편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초안 마련 및 내·외부 의견수렴(1~3월) ❖ 舊 선박교통통신원 운영 실태조사 및 명칭 공모(1월) ❖ 내·외부 의견수렴 및 선박교통안전리포터 운영지침 제정(2~3월)
2분기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등에 전파(4~6월) ❖ 선박교통안전리포터 조직 정비 및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4~6월)
3분기	❖ 선박교통안전리포터 발대식(7월)

국민 친화적	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수상레저
	4.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및 법령체계 개편	

[과제목표]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때마련

□ 추진 배경

○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법」 및 「수상레저안전법」의 국회 통과 이후 1년 유예기간 동안 **전문화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추진

○ 방대한 양의 **제·개정안**(시행령 2, 시행규칙 2, 행정규칙 11)을 효율적으로 입안하기 위해 **초안 자체 작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기간 최소화 도모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하위법령**(시행령1, 시행규칙1, 행정규칙6) **제정**, 신설규정은 유사 입법례 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제정 추진

〈 **주요 신설 사항** 〉

✓ (**검사필증 부착**) 안전검사 합격한 기구에 안전검사필증 발급 및 부착 의무화

✓ (**안전기준의 장 신설**) 위치발신장치·무선설비, 복원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1, 시행규칙1, 행정규칙5) **재정비**, 법 시행(공포후 1년)에 맞춰 분야별 전문화된 하위법령 제때마련 추진

〈 **주요 개정 사항** 〉

✓ **(기구별 운항규칙 세분화)** 기구별 특성에 맞는 운항규칙 전면개정(대통령령)

✓ **(위원회)** 현행 기술자문위를 법령에 근거한 '(가칭)안전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 **(국민편의 제도개선)** 각종 신고서식, 행정제재처분, 등록번호판 규격 정비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상레저안전법」 분법안 통과(3월)
2분기	❖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6월)
3분기	❖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7~9월)
4분기	❖ 하위법령 제·개정안 법제처 심사 의뢰(10월)

국민 친화적	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수상레저
	5. 국민편의를 대폭 강조한 수상레저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과제목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지능형 수상레저안전 서비스 제공

□ 추진 배경

○ 최초 구축 후 10년 이상 된 노후시스템으로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부재, **민원처리를 위해 국민이 직접 기관방문, 국민 불편 초래**

※ **(사업기간)** '21년 ~ '23년, **(예산)** 총 45억 <1년차 20억, 2년차 15억, 3년차 10억>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갱신 안내문·행정처분 고지 등을 **종이우편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 우편 제작·발송비용 절감 및 국민편익증진

○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바일 기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간편신고 및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 국민이 **자주 요청하는 주요민원**을 AI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답변하는 **'수상레저 챗봇'** 구축, **개별 맞춤형 수상레저상담 지원**

○ 조종면허증 신청에서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처리가능한 **모바일 조종면허증 발급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행정·민간의 전자서명을 적용, 편리하게 수상레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도입·서비스 확대**

*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디지털원패스, 패스 앱 등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 **정부24**와 연계 수상레저 **민원서류·증명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개별 맞춤형 365일 수상레저 챗봇 상담서비스(2월) ❖ 면허갱신 안내를 위한 모바일 대국민 전자고지 서비스(3월) ❖ 모바일 수상레저활동 간편신고 및 기상정보제공(3월) ❖ 본인임을 편리하게 증명하는 간편인증 도입(3월)
2분기	❖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약 추진(5월)
3분기	❖ 모바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서비스(7월)
4분기	❖ '정부24'에서 수상레저관련 민원서류 및 증명서 발급(12월)

국민 친화적	라. 수혜자에게 공감받는 서비스 개선	행정법무
	1. 주요업무 정책 모니터링 조사 및 결과 환류 확대	

[과제목표] 본청 과별 주요 정책모니터링 조사 의무화 및 결과에 따른 정책반영 추진

□ 추진 배경

―【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청장님 말씀(12.22) 】 <(상황실, 정보과 발표 시) 2차례 강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만족도를 측정을 의무화할 것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친화적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의견조회를 해볼 것

○ (정책피드백) 주요 정책 시행관련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다양한 환경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수용성 높은 정책개선 지원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계획 수립) '22년 주요업무계획 관련 정책과제별 만족도 조사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책모니터링 지원방안 세부계획 수립

○ (조사 방법) 문자조사 및 전화조사 방법의 정책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시스템, 편의성, 행정변화 등 국민의 시각을 다양하게 청취

○ (활용 방안) 정책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능별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안점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정책에 반영

* 「해양경찰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조사결과 통보 등)

(예시) '22년도 주요업무계획 과제	조사방법	대 상	시 기	조사결과
(법무) '법'에 기반한 여건마련을 위해 각종 법률제·개정추진	문자	현장직원	'22년 7월	정책유지
(성과) (중점) 동료 친화적 소통 활성화와 업무시스템 구축	전화	全 직원	'22년 12월	정책수정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주요정책모니터링 조사 계획 수립·운영(2월~3월)
2분기	❖ 정책모니터링(4~6월)
3분기	❖ 정책모니터링(7~9월) 및 설명회 개최
4분기	❖ 정책모니터링(10~12월)

국민 친화적	라. 수혜자에게 공감 받는 서비스 개선	종합상황실
	2. 상황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상황대응 체계 확립	

[과제목표] 수집정보의 다양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로 對 국민 서비스 확대

□ 추진 배경

○ **통합신고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도시안전망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로 **對 국민 서비스 확대**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① 통합신고처리시스템 내 **'스마트 신고접수 시스템(가칭)'** 기능 구축

- 신고자 휴대폰을 통해 현장영상을 상황실 및 구조세력이 실시간 공유하여 **초기 현장상황정보 실시간 확인** 및 **위험성 판단** 가능

< 스마트 신고접수 시스템(가칭) >

■ 신고자에게 URL 문자를 발송(별도앱 설치 ×), 신고자 핸드폰으로 현장영상 및 위치를 신속히 확보하여 정확한 현장정보 파악 및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지원

■ 별도앱 설치가 필요 없어 노약자, 아동 등 정보소외계층도 손쉽게 이용 가능

- **(추진) '22년 예산**(796백만원) **확보** 후 '23년 시스템 구축

② 연안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 국토부·지자체 주관 도시안전망 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용 권한을 活 상황실에 연계**하여 연안사고 발생시 효율적 대응 가능

* 지자체 CCTV 및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권한 연계로 사고발생 시 실시간·녹화영상 등 확인 가능하여 고립자, 익수자, 해상투신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효과적 대응 가능

** 국토부 및 지자체 예산(각 50%)이용 설치, 국토부와 MOU 체결('22년) 후 '23년부터 해경서별 단계적 연계·설치 추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를 위한 국토부와 MOU 체결
연중	❖ 스마트 신고접수 시스템(가칭)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대응

국민 친화적	라. 수혜자에게 공감받는 서비스 개선	수사심사
	3. 지방청 중심 수사심사체계 확립으로 책임수사 구현	

[과제목표] **보완수사 요구율** ('21년) 신규→ ('22년) 3% 미만

□ 추진 배경

○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도 시행 초기 본청 중심의 수사심사제도 구축으로 전국적 통일성 및 수사심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일선 현장에서의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 중심 심사체계로 전환**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조직·인력)** △ **지방청** 수사계 內 **수사심사반 운영**(수사심사 업무 전종) △ **지방청 수사심사관 확대**(변호사 1명 → 변호사·수사심사관 특채자 등 2명)

○ **(역할분담)** △ **(본 청)** 수사통제 및 **중요사건 수사심사** △ **(지방청)** **'경찰서-지방청 간 2중심사체계 구축'**으로 수사의 완결성 강화

- [**중요사건**] 수사국장 지시사건 등에 대하여 **본청 수사심사관 중심 '수사심사지원팀'**구성, **초기수사 및 영장신청 단계**에서 **집중심사** 실시

- [**이중심사**] 경찰서에서 1차 심사를 완료한 **송치·불송치·자체종결** 中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2차 심사 실시

* 송치사건(범행부인 사건), 불송치사건(全 사건), 자체종결사건(고래·변사등 단순신고 제외)

○ **(교육강화)** △ 경찰서·지방청 자체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관서별 차등 교육*** 실시 △ **수사기법 개발·공유**을 통해 수사의 상향적 평준화 도모

* (대상) 수사심사 평가 결과 최하위 3개 관서 선정 (방식) 매월 1회, 본청 소집교육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지방청 수사계 內 수사심사반 구성(1월) ❖ 경찰서-지방청 2중심사 시행(1월)
2분기	❖ 수사심사 평가 토대로 실습교육 실시(4월)
3·4분기	❖ 수사기법 개발·공유(7월~)

국민 친화적	라. 수혜자에게 공감받는 서비스 개선	수사심사
	4.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수사 선도기관 도약	

[과제목표] **수사민원 서비스 만족도** ('21년) 92.2점 → ('22년) 93점 이상

□ 추진 배경

○ **(수사경찰을 통한 인권보호)** 그간 인권보호는 피의자·피해자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수사경찰의 태도, 마음가짐 등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수사 만족도·청렴도 향상과 인권보호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일방적인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단순한 조사·수사의 대상이 아닌 **접촉고객으로 관리** 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수사·조사 문화 개선)** 기존 **일방적인 조사방법에서 탈피**하여 선진 수사 문화를 지향하는 **사건관계인과 쌍방 소통하는 조사방식으로 전환**

* 조사 시 피의자 용어 대신 성명·존칭 사용, 사건관계인 주장 先 청취 후 범죄사실 등 질문,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가진단, 「수사관 윤리 강령」 마련

** 수사절차 단계별 「'더 듣고 더 설명하는' 친절·공정수사 매뉴얼」 작성

○ **(사건관계인 만족도 관리)** 사건관계인 대상 수사과정 중 **인권침해 여부 등 만족도에 대한 본청·지방청에서 주기적인 사후 점검 실시**

* 본청·지방청에서 수사분야 자체 클린콜[Clean-Cal / (가칭)] 시스템 운영

○ **(인권교육 강화)** **수사연수소**에 인권보호 전문 **「수사인권과정」 개설, 전체 수사전문과정(18개)에 반부패청렴교육(2시간↑) 필수적 포함**

○ **(외부 협력강화)** **인권위 등**에서 접수·처리되는 **경찰 관련 주요 인권 침해 유형 사례 등에 대한 사전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수사연수소 「수사인권과정」 신설 등 교육계획 반영
2분기	❖ 수사·조사문화 및 청렴도 향상 대책 계획 수립
3분기	❖ 전국 수사부서 인권 및 청렴교육(워크숍) 실시
연중	❖ 수사분야 접촉고객에 대한 청렴·만족도 관리(클린콜 운영 등)

국민 친화적	라. 수혜자에게 공감받는 서비스 개선	수상레저
	5. 실질적 수상레저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목표] ❶ 수상레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종면허 제도 전면 개편
❷ 급증하는 무동력기구 및 신종기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추진 배경

○ 제도 신설('00년) 이후 21년간 유지되던 **조종면허 체계 개편*** 추진

* 면허 등급간 차별화, 신종기구 특성을 반영한 평가법 개발, 활동자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

○ 주취조종의 안전사고 위험성,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카약·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활동 시 처벌 필요**

* 해사안전법(제41조), 유·도선사업법(제12조)상 동력·무동력 구분 없이 음주운항 처벌 中

○ 최근 북·남한강을 중심으로, **웨이크서핑***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 보트에 파도생성 장치(플레이트판)를 설치, 서핑을 위한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는 신종 기구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수상오토바이·견인용 수상레저기구** 등 고위험 레저기구 안전관리를 위해 **조종면허 분리·신설*** 검토

* 면허 신설(수상오토바이면허) 관련 법령 정비, 시험(평가) 방법 개발 등

○ 해상기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무동력기구 음주조종** 및 인공파도로 피해를 유발하는 **웨이크 서핑보트 운항 제한****규정 마련

* (음주)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주취조종금지) 개정 / ** 미국, 일본, 호주 등 규제 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웨이크서핑) 해양경찰위원회 심사(2~3월) * 의견조회('21.12.13~27)
2분기	❖ (웨이크서핑) 규체·법제처 심사(4~6월) ❖ 수상오토바이 실기시험 코스, 평가기준마련을 위한 대행기관간 간담회(6월)
3분기	❖ (웨이크서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별표 7, 운항규칙) 개정 공포(7월) ❖ 수상오토바이 활동자 대상 공청회 개최(9월)
4분기	❖ 일본 수상오토바이 시험장 현장 방문(11월)
연중	❖ (무동력기구 음주조종 금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추진

국민 친화적	마.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전략 홍보	해양안전
	1. 연안안전교실 등 국민 친화형 교육 확대	

[과제목표] '22년 연안안전교실·생존수영 등 교육참여 3만명 목표

□ 추진 배경

○ 해수욕장·갯벌 등 연안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따른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 학생 등 대상 안전교육을 통한 해양안전의식 확립 필요

○ 단계적 일상회복 등 감안, 내륙으로 교육 확대 및 대면교육 및 비대면 교육을 통한 교육 확대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내륙 교육 확대)** 지방교육청과 협력, 내륙 초·중·고교까지 교육 지원

○ **(안전교육 내실화)** 기존 교육자료 등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표준교재 제작, 필수 교육기자재 수요조사 및 보급

○ **(우수강사 등 선발)** 전국 안전교육 담당자 대상 우수강사 선발대회 개최 및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 강의기법, 교육자료 등 공유

○ **(민간위탁 추진)** 전문강사에 의한 위탁교육 시범운영 추진 및 교육 효과, 만족도 등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

○ **(교육동영상 제작)** 비대면 교육수요 등을 감안, 물놀이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동영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 포함) 제작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1월) ❖ 국민 안전교육 필수 교육기자재 수요조사 및 보급(3월)
2분기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표준교재 제작(4월) ❖ 물놀이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배포(6월)
3분기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민간위탁 시범운영 추진(7월) ❖ 안전교육 우수강사 선발대회 개최(9월)
4분기	❖ 2022년 국민 안전교육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12월)
연중	❖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생존수영 실시(연중)

국민 친화적	마.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전략 홍보	대변인
	2. 전략홍보로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음악 활용 기획홍보 강화	

[과제목표] **방송 프로그램 등 제작·지원** ('19, '20, 21년) 71건 → ('22년) 96건

□ 추진 배경

○ 소규모의 단발적 홍보에서 **대형기획 및 중장기홍보로 전환** 필요, 해양안전 · 해양환경 등 테마 기반 「**대규모 프로그램**」 **기획 · 송출**

○ 또한 TV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매체로 **방송사를 통한 홍보** 필요

* 감소 추세에 있던 TV 이용률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가장 많이 이용(94.8%)하는 매체의 위상 유지(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안전 · 해양환경 등 테마 기반 「**특별 대형 콘서트**」 **기획 · 송출**

*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가칭)' 이라는 주제로 다부처 협업(우리청 · 동북아역사재단 · 경찰 · 해수부 · 지자체 등)을 통한 특별 대형 콘서트 추진

○ **TV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해양경찰 · 해양안전(주권) 인식 개선

*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집사부일체', '관찰카메라' 등 주요 방송 매체 및 신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국민 해양안전 인식 개선 지속 추진

○ MZ ·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영토)' 노래 · 안무 개발** 및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작사(곡)가 협업 **'해양경찰의 노래'** 제작

○ '노래공모전(4회)', '독후감 경진대회(3회)' 등 **홍보 플랫폼 브랜드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대형 콘서트 관련 기획·제안 등 多부처 협업 발판 마련(~3월) ❖ 작사·작곡가 협업, 대국민 '해양경찰 노래' 제작·확산
2분기	❖ 대형 콘서트 협업 부처 확정 및 방송사 섭외 등(~6월) ❖ '해양경찰·해양안전·해양영토' 노래 및 안무 개발(~6월)
3분기	❖ 특별 대형콘서트 제작 및 송출(~9월), 해양안전 노래·안무 확산(~9월)
4분기	❖ 제4회 해양경찰 노래공모전 및 제3회 해양경찰 독후감 경진대회(~12월)
연중	❖ 신규 및 기존 인기 tv 프로그램 활용 우리청 활동사항 등 기획홍보

동료 친화적 소통

(Colleagues-Friendly Communication)

동료 친화적	가. 상생하는 조직문화 조성	행정법무
	1. 상호 존중 · 배려하는 동료 친화적 소통 활성화	

[과제목표] 당당해(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 프로젝트 출범(3월), 조직문화 개선 추진실적 점검/만족도 조사(분기)

□ 추진목표 및 배경

○ (목표) 당당해(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 프로젝트 전략체계(조직문화 개선 플랫폼) 활용 직원 상호 간 존중·배려하는 **동료 친화적 소통 문화 정착과 모두의 상생**(Win-Win) **도모**

○ (배경) 시대·세대 변화, 임무수행 여건·난이도 고려 시, **세대·계급·성별의 구분을 넘어 해양경찰의 이름으로 더 단단하고 강인한 조직 구축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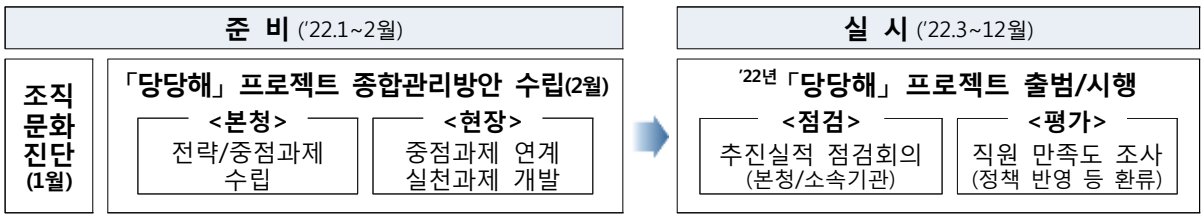
○ (세부내용) 당당해(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존중·배려의 **동료 친화적 소통 문화를 구축, 세대 간 융합과 계급·성별 간 갈등 해소** 추진

┌(**세대 간 융합**) 기성세대 제대로 알기(따뜻한 이해), 선배직원들의 생각·핵심 노하우 전수 등 동료 친화적 소통 활성화로 세대 간 조화와 시너지 창출

※ MZ세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 MZ세대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성은 유지

└(**계급·성별 간 갈등 해소**) 조직 긍지·주인의식 함양, 올바른 리더십·팔로우십 정립을 통해 '해양경찰' 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임무완수에 힘쓰는 문화 조성

○ (이행계획) '22년 당당해(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 프로젝트 종합관리방안 수립/시행을 통해 분기 본청·소속기관 조직문화 개선 추진실적 점검, 직원 만족도 조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해양경찰 갑질사례 분석 30선」 발간/배포 (1월) ❖ 조직문화 진단 및 '22년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 프로젝트 출범 (1~3월)
2~4분기	❖ 「당당하고 멋진 해양경찰 되기」 프로젝트 추진실적 점검회의 (4~12월) ❖ 변화관리 명사 초청/특강 (4·7월),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조사 (5·8·11월) ❖ 新 정부 국정과제/유관기관(행안부·인사처) 지침 연계 당당해 프로젝트 리뉴얼 (7월) ❖ '22년 「당당해」 프로젝트 추진 결과 및 '23년 조직문화 개선 방향성 보고 (12월)

동료 친화적	다. 양성평등 인식 확산	양성평등
	2.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	

[과제목표] 4대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이수율(90%)

□ 추진목표 및 배경

○ 대국민 접점에 있거나 조직 내 파급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직위를 대상으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제도 시행 전후 '조직역량의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 동참을 유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해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운영**

○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승진자), 실무교육과정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해양경찰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 및 컨텐츠를 제작**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성평등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주간(9.1~9.7) 운영, 모범사례 발굴 공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수립된 계획이 현장의 공감을 얻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장애요인은 없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소통하는 '정책 환류' 일상화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분기	❖ 양성평등 교육자료 및 컨텐츠 제작
3분기	❖ 양성평등주간 운영 캠페인 전개
연중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동료 친화적	가. 상생하는 조직문화 조성	인 사
	3. 상호 이해도 증진을 위한 순환보직 활성화 방안 추진	

[과제목표] ('22년) 의견수렴 및 추진 계획 수립 → ('23년) 시행(유예검토 포함)

□ 추진목표 및 배경

○ 최근 몇 년간 **업무량·수당·개인가치 등의 사유로 사무실 근무를 기피**하여 인력난 지속·행정의 취약성 등 **현장과 소통이 결여되는 정책생산** 우려

○ 지속적인 사무실 인센티브가 아닌 **승진연계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방안 추진**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승진 요건)** 신임경찰 순환전보와 연계하여 **경위·경사 계급에서 사무실* 의무근무기간**을 설정**, 충족된 자에 대해서만 승진(심사·시험) 가능

* 상황실·VTS 등 현업부서가 아닌 본청·지방청·경찰서의 실제 정책부서

<**사무실 의무 근무기간(안)>

구 분	내 용(의무근무기간 설정)
경위 (경감으로 승진 시)	**경위 이하 계급**에서 **사무실 3년 이상**
경사 (경위로 승진 시)	**경사 이하 계급**에서 **사무실 2년 이상**
순경·경장	함정 및 육상부서 각 1년 이상(임용부터 3년 이내) <현행 순환근무 규정 적용>

⇒ 의무근무기간은 최근 승진자의 부서경력 및 인사운영상황 등 감안, 최종 설정

○ **(기대 효과) 정책부서와 현장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으로 직무경험·역량의 높은 수평을 맞추고, **승진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22년 승진 및 전보현황 분석(2월) 및 승진요건제 기본계획 수립(3월)
2분기	❖ 승진제도 개선 TF운영(4월~), 본청·소속기관 의견수렴(5월) 및 관계부처 협의(6월)
3분기	❖ 본청 현안실무회의 등을 통한 최종계획 수립(7월) 및 인사관계법령 개정 추진(8월)
4분기	❖ 인사관계법령 개정 대응 및 개정(~12월)
연중	❖ 승진제도 개선관련, 의견수렴 및 현황 분석(계속)

동료 친화적	가. 상생하는 조직문화 조성	대변인
	4. 해양경찰 '이색 공무원' 발굴을 통한 자긍심 제고	

[과제목표] 이색 공무원 발굴 및 기능간 협업과제 발굴(분기별 1회 이상)

□ 추진 배경

○ 특별한 업무수행 또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이색 직원 발굴, 기획 홍보 추진을 통해 직원의 자긍심 제고 및 해양경찰 이미지 개선

○ '상하' 및 '기능' 간 경직되기 쉬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말랑말랑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기능 간 협업 통한 소통문화 조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이색 동료)** 우리 주변의 평범함 속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동료 발굴, 기획보도 · 방송 및 영상 컨텐츠 제작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추진

* 언론사 통한 기획보도, '유퀴즈 온더 Sea「가칭」' 등을 통한 자체 컨텐츠 제작 등

< 해양경찰 이색 공무원 기획보도 사례>

특공대 노기도 경감

관현악단 배지원 경위

정장 유세종 경위

항공대 김형경 경위

○ **(소통문화)** '대변인실다운' 창의적이고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방법 활용* 및 기능 간 다양한 협업과제** 발굴·추진

* 만다라트, 스노우볼링 등 창의적 생각법 활용, 브라운백 미팅 및 우수 아이디어 포상

** 대변인실 및 각 기능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주간보도 실무회의(매주)」 시행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우리 주변 속 '특별한 동료' 찾기 캠페인 계획 수립, 중부청 '이색 동료' 발굴
2분기	❖ 서해청 '이색 동료' 발굴 및 기획 홍보
3분기	❖ 남해청.동해청 '이색 동료' 발굴 및 기획 홍보
4분기	❖ 제주청 '이색 동료' 발굴 및 기획 홍보
연중	❖ 분기별 '기능' 및 '계'별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주간보도 실무회의 등)

동료 친화적	나. 현장 부서 근무여건 개선	운영지원
	1. 현장·사무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스마트 워크센터' 마련	

[과제 목표] 현장부서(함정, 파출소) 직원이 경찰서 방문시 행정업무 처리 및 소통을 위한 공간(스마트워크 센터) 구축으로 현장직원 불편함 해소

□ 추진목표 및 배경

○ (추진 배경) 위성통신망 개선 등으로 경비함정 업무환경은 개선되었지만 **현장 근무자가 경찰서 방문**하여 **업무처리시 사무공간 부재**

○ (추진 목표) **현장↔사무실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소통방**(스마트워크센터) 설립을 통하여 행정편의 및 **소통업무 효율성 제고**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단 기) 전담예산 확보 전까지 소속관서에서 보유중인 **자체 시설물**(사무공간, 컴퓨터) **최대 활용, 소통방 구성**

○ (중 기) 소통방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리 칸막이, 전용 PC) 확보를 위한 **중기소요예산 대응·확보**, 소통방 운영 고도화 추진

* 필요예산 총 750백만원(관서당 3,000만원/지방청 5개소, 해경서 20개소)
· 공사비 2,200만원 : 유리칸막이, 바닥 및 벽체공사
· 자산취득비 800만원 : 가구류(테이블/의자), PC(내부/외부망), 프린터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전국 관서별 '소통방(스마트워크센터)' 구성현황 파악 및 필수 사무기구 의견조회
2분기	❖ '소통방(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시범운영 실시
3분기	❖ 소통방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4분기	❖ '올해 최우수 소통방' 우수관서 선정, 청장님 표창 등 인센티브 건의 및 지속관리
연중	❖ 소통방 운영 활성화 예산 중기사업 편성·확보

동료 친화적	나. 현장 부서 근무여건 개선	양성평등
	2.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과제목표] **사건처리매뉴얼 발간** ('22년 1분기) 1건

□ 추진목표 및 배경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사건처리 전문성 강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전 직원 대상 법령*에 근거한 **4대 폭력예방 연간 의무교육** 추진 및 참여율 제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실태, 예방노력 등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 및 분석·평가**

○ **예방지침*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사건처리 절차를 구체화한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홍보**

*「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11.24)

○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내부 **고충상담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상담 및 사건처리 전문성을 제고**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양성평등 외부 민간네트워크 구축, 고충상담원 교육
2분기	❖ 2022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 추진계획 수립
4분기	❖ 고위직·수사(여성폭력)담당 특별교육
연중	❖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소속기관 현장점검 및 분석·평가

동료 친화적	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감사
	1. 「바로BARO·해海플랫폼」을 통한 적극행정 기반 구축	

[과제목표] **예방감사 전환** ('21년) 자가진단 체계 도입 → ('22년) 고도화 추진

□ 추진목표 및 배경

○ **(목 표)** 자율적 자가진단 체계 명문화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배 경)**

┌ ❶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 증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감사방식 필수

└ ❷적법성 감사는 플랫폼을 통한 서면감사로 대체, 조직의 목표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성과, 특정 등)에 집중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실태 점검)** 개인별·부서별 기본업무 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직무수행 진단리스트 배포 → 진단결과 취합·분석 → 취약요소 실지 점검

○ **(연구 용역)** 기능별 진단리스트 과제(40과제 950문항) 추가 발굴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 * 법령, 행정규칙, 매뉴얼→ 체크리스트화

○ **(규정 마련)** 자가진단 명문화를 목표로 규정 마련 등 플랫폼 완성 노력

* 내부규정(가칭 '해양경찰청 자율적 자가진단 체계에 관한 규칙') 마련 타당성 및 절차 확인, 향후 시스템化를 위한 소요 예산 확보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기본업무 추진실태 점검(현장 확인) 및 결과 도출(2월) ❖ 정기인사 반영한 바로·海 담당자 대상 전략회의 개최(2월)
2분기	❖ 내부규정 관련 조항 마련 및 타당성 등 검토(4월)
3분기	❖ 바로·海 진단리스트 추가 발굴 위한 연구용역 의뢰 등 보고회 개최(7월)
4분기	❖ 업무포털 내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소요예산 확정(11월)
연중	❖ 바로·海 진단리스트를 활용한 업무 분석 및 개선점 상시 발굴

동료 친화적	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	감사
	2. 예방적 공직복무 관리로 「주요 비위사고」 감소	

[과제 목표] **주요비위 발생 감소 ('21년)** 총 31건 → **('22년)** 총 26건 **(15% 감축)**

□ 추진목표 및 배경

○ 최근 공직사회 **성 비위**와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차원의 **근절 대책추진**으로 **국민 신뢰 초석** 마련

* 여군 성추행 사망 등 공직사회 기강해이, 무관용 일벌백계 VIP지시('21. 6. 28.)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무조정실과 유기적인 협조로 **시기·테마별 공직기강** 점검 내실화

* 복무사각지대, 행락철, 해빙기, 명절 전후, VIP 해외순방 등 맞춤형 활동 전개

○ 「**성 비위 전담반**」 운영을 통한 내부 성비위 '**20일 이내**' 처리 목표

* 조직 내부 성 비위사건은 가·피해자 즉시 분리조치 후 본청 조사 원칙 추진

○ **갑질 근절** 실태조사, **특별 신고기간 운영** 및 소속기관 교육 강화

* 신임직원, 부서장급 이상 갑질·성비위 예방을 위한 본청 주관 교육 의무화

○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범사례 발굴**과 제도개선

* '22년 빛과 소금 제도 운영, 열심히 근무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전국 파출소장·함정장·구조대장 등 **부서장급 본청 주관 예방교육** 추진(2월~) ❖ 2022년 **해양경찰청 공직복무관리** 계획 수립(3월경 국조실 지침 하달시)
2분기	❖ 상반기 **갑질 특별 신고기간** 운영 및 실태조사 실시(3월) ❖ 본청 감사담당관, 전국 지휘관 및 과장급 순회 교육(4·5월)
3분기	❖ 상반기 '빛과 소금' 선발 및 포상(7월) ❖ 소속기관 공직복무관리 실태점검(9월)
4분기	❖ 2022년 **해양경찰청 관용심사위원회** 개최(11월) ❖ 하반기 갑질 특별 신고기간 운영(12월)
연중	❖ 「**성 비위 전담반**」 운영 / **시기·테마별** 공직기강 활동(명절 전후, VIP 해외순방 등) ❖ 해경교육원, **신임 직원** 본청 감사담당관 주관 공직복무 특별강의 추진

미래 친화적 준비

(Future-Friendly Preparation)

미래 친화적	가. 첨단기술 활용한 업무체계 전환	경 비 해양경비기획단
	1. 광역 해양 정보·상황인식 체계 구현	

[과제목표] **경비체계 고도화** ('22년) 법령 개정 →('26년) 시스템 구축 →('30년) 세력 증강

□ 추진 배경

○ **해양주권·안전·치안·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대***하고 있으나, **한정된 국가자원**(함정·항공기 등)으로 관할해역(45㎢) **효율적 관리 곤란**

* 불법조업 외국어선, 독도·이어도 주변해역 외국관공선 출현, 해양사고, 밀입국 등

○ 인공위성·무인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광역 해양정보망**을 **구축**하고 '**해양경비정보**'를 융합, **선제적 대응 필요***

* (해외사례) 美·日 등은 해양 정보·상황인식 체계(MDA)를 구축·활용 중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해양경비정보' 정의와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추진

* '21.5.11. 발의 → '21.12.8. 법안소위 의결

○ **해양경비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위험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해양경비정보분석시스템**' **개발**('22~'26년 / 총 99.4억 원)

○ **비군사적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해양경찰 전력 증강 추진**('22~'30년)

* 전력증강(안) : 대형함 9척, 무인기 4대, 해양정보함 1척, 탑재드론 10세트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해양경비법 개정안 심의 및 하위법령안 마련(1~3월) ❖ 법제사법위원회 해양경비법 개정안 심의(4~6월) ❖ 국회 본회의 해양경비법 개정안 심의(7~9월) ❖ 전력증강 사업 예산 반영 추진(10~12월)
'23~'26년	❖ 해양경비정보분석 시스템 개발
'23~'30년	❖ 대형함정, 무인기 등 해양경찰 전력 증강 추진

미래 친화적	가. 첨단기술 활용한 업무체계 전환	스마트
	2. 해양경찰 위성센터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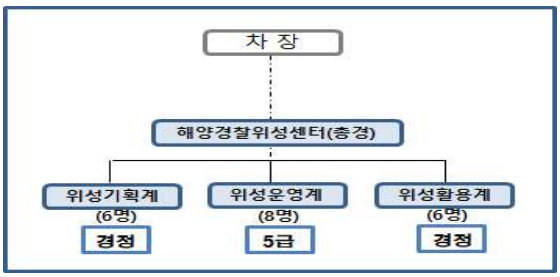
[과제목표] **('22년)** 자체위성 및 인프라 → **('26년)**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

□ 추진 배경

○ MDA 기반구축을 위한 **관측위성('22년~), 통신위성('21~), 수색구조위성('22~)** 사업이 동시 추진됨에 따라 **위성센터 인프라(인력, 부지·청사, 시스템) 시급**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소요정원)** 위성사업 총괄 부서로 위성개발부터 위성영상 활용까지 **위성기획 - 운영 - 활용 조직 신설***



* 기구신설 및 21人(경찰관9, 일반직 11) 요구

○ **(부지확보)** 안테나 수신환경과 주변전파 신호잡음 등 **조사* 후 최적 부지** 선정

* 가시선 고려 시 舊 인천서 부지가 1안이나, 인천VTS 등 전파환경 정밀측정 필요

○ **(청사설계)** 관제실(상황실), 장비(서버)실, 안테나(옥상) 설치 등 고려 위성 운영, 활용에 **적합한 청사* 설계(국유기금:'23년9억원) 예산** 확보

* 최소 연면적 약 2000㎡, 3층 이상 건물 필요(전체 건축 사업비 약 225억 원 추정)

○ **(시스템)** 위성관제·수신·처리·주문·배포(활용) **플랫폼 추진*('23년 R&D사업)**

* **관제**(명령전송)→**수신**(위성자료)→**처리**(산출물재생산)→**주문**(촬영지역)→**배포**(유관부처)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부지선정(~2월), 소요정원(3월), 국유재산 기금(3월), 신규R&D예산 요구(5월)
'23년	❖ 직제·시행규칙 개정, 청사 기본설계, 위성센터 시스템 설계 착수
'24년	❖ 청사실시설계 및 착공, 위성센터 시스템 상세설계 종료
'25년	❖ 관측위성 시제기 발사에 따른 초기 위성운영, 위성센터 준공, 관계기관 계획 수립
연중	❖ 위성센터 구축 추진현황 월간, 분기, 반기 정기·수시 점검

미래 친화적	가. 첨단기술 활용한 업무체계 전환	수색구조
	3. 대형 해양재난에 대비한 첨단 수색구조 체계 마련	

[과제목표] 연구개발(R&D) 진행경과 집중 관리를 통한 과학적 수색구조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 **(대형재난 발생우려)** 코로나19 이후 **해상 물동량·이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의 빈번한 발생이 우려**

○ **(수색구조 환경변화)** 인간의 주관적 경험, 구조대원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객관적 데이터 바탕의 수색구조 체계 마련**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수중수색의 과학화) 현장(수중)은 군집 자율무인정을 투입**하고 **육상은 관련 데이터를 분석,** 실종자 위치 확인 및 최적의 수중수색 임무계획 도출

○ **(표류예측 고도화) 한국인 신체특성 및 우리 해역에 주로 운항하는 선박의 표류 경로**를 데이터로 축적,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색구역 결정**

* 현장에 적합하고 실용성 높은 결과물 도출을 위해 현장대원 중심 리빙랩 구성

○ **(기대효과)** 빅데이터·AI 기반의 **한국형 해양재난 대응체계(K-SAR)**를 완성하여 수색구조의 효율성 극대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구축 R&D」 연구기관 설정
'23년	❖ 군집 수색형 수중로봇 시스템 제작 구현 및 기본성능 검증 시험
'24년	❖ 한반도 저역에 대한 고해상도 조위·조류 데이터 베이스 구축
'25년	❖ 군집 수색형 수중로봇 및 지능형 해양사고 대응 플랫폼 실해상 검증
연중	❖ 연구기관-리빙랩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의견 전달

미래 친화적	가. 첨단기술 활용한 업무체계 전환	해양경비기획단
	4. AI기반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목표] **시스템 구축** ('22년) 시스템 도입 →('26년) 시스템 구축 완료

□ 추진 배경

○ 외국어선, 불법조업 지능화 등 관할 해역에서의 주권·안전·치안·환경 위협하는 요인 증가, **한정된 경비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 요구**

○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의 발전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위험, 치안수요 예측** 등 AI에 대한 신뢰도 향상되어 활용사례 증가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감시장비 탐지정보 통합)** AIS, VPASS, 레이더 등 상이한 형태의 위치신호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우리청 자체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 무료 프로그램 이용 특정기업 종속 차단

○ **(해양상황분석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상에서 수집한 선박 위치정보(AIS, VPASS 등)와 영상정보(항공기, 위성영상)를 분석하여 실시간 경비세력에 불법선박, 미식별 선박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선제적 대응체계 기반 마련

* 연안해역위험지수, 경비위협지수 등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022년	❖ 감시장비 표준신호 통합 체계 구축
2023 ~ 2025년	❖ 실시간 해양분석 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AI 예측모델개발
2026년	❖ AI기반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완료 및 안정화

미래 친화적	가. 첨단기술 활용한 업무체계 전환	대변인
	5. 플랫폼 'ZEPETO' 활용 「해양경찰 메타버스 세계관」 구축	

[과제목표] 제페토 및 후시 플래닛 매타버스 구축(22년)

□ 추진 배경

○ 새로운 소통채널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해양경찰 월드를 제작하여 정책 수요자인 MZ세대에게 해양경찰의 비전과 임무 홍보 및 소통

* 오프라인 행사와 동일하게 매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성세대와 MZ세대 등 새로운 세대와의 자연스러운 소통 가능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ZEPETO(네이버, 국내이용자 2억명)' 메타버스 플랫폼에 해양경찰 월드 구축

* 해양경찰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복착용, 경비함정, 항공기 등 체험

1분기 중	2분기 중	3분기	4분기
메타버스 세계관 구축 계획 수립 ➜	업체 선정, 월드 구축·운영 ➜	해양안전 체험 해양경찰의 날 업데이트 ➜	메타버스 홍보 확산 위한 이벤트

○ 메타버스 '후시 플래닛[1]' 플랫폼 활용 친환경 해양경찰 ZONE 구축

* 구명조끼 입기·해양쓰레기 줍기 등의 테마 게임 및 함정 운항 등 체험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후시 플래닛' 메타버스 구축(4월), 'ZEPETO' 월드 구축(8월)
'23년	❖ ZEPETO(국내 플랫폼) 內 해양경찰 복제 및 월드 업데이트
'24년	❖ 'ROBLOX(세계적인 플랫폼)',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해양경찰 월드 확장
연중	❖ ZEPETO 內 '여름철 해양안전 교실', '해양경찰의 날 행사장' 업데이트

1) **(후시플래닛)** W재단 협력기관 '엔더블유케이(NWK)'에서 제작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해양경찰 체험존 구축을 목적으로 2022년 2월부터 제작 예정.

미래 친화적	나. 미래형 조직체계 구축	수사기획
	1. 사법경찰관 정원 확보 및 전문수사 인력 육성(채용)	

[과제목표] '26년까지 △ 사법경찰관 정원 70%확보 △ 변호사 27명, 심사관 16명 선발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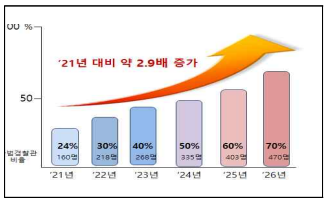
○ **(책임수사 한계)** 우리청은 국내 唯一 해양수사 기관이지만 법령상 수사주체인 **사법경찰관 부족***으로 **책임수사 및 적법수사 한계**

* 수사부서 정원 중 사법경찰관은 '21년 24%(160명) → '22년 30%(218명)로 확보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정원확보)** '26년 까지 사법경찰관 70% 확대 추진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정원	30%(218명)	40%(268명)	50%(335명)	60%(403명)	70%(470명)



○ **(내부육성)** 다수의 사법경찰리가 향후 사법경찰관으로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승진 등 기회 제공

* △ 경찰서 수사정원의 10%이상을 순환근무가 종료된 신임순경 중 선발 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사인력 지속 충원 △ 간부후보자 임용자 중 20% 수사경과 부여

○ **(수사전문가 채용)** 책임수사를 위해 변호사·수사심사관 채용 지속

구분		계	旣채용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경감	변호사	27명	11명	4명	3명	3명	3명	3명
	심사관	16명	6명	5명	5명	-	-	-

* 우수 변호사 선발을 위해 채용시기를 상반기로 조정 및 로스쿨 등 홍보 실시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사법경찰관 40%(50명) 확보 대응 / 변호사 4명, 수사심사과 5명 선발
'23년	❖ 사법경찰관 50%(67명) 확보 대응 / 변호사 3명, 수사심사과 5명 선발
'24년	❖ 사법경찰관 60%(68명) 확보 대응 / 변호사 3명 선발
'25년	❖ 사법경찰관 70%(67명) 확보 대응 / 변호사 3명 선발
'26년	❖ 변호사 3명 선발 (총 변호사 27명, 수사심사과 16명 선발)

미래 친화적	나. 미래형 조직체계 구축	과학수사
	2. 미래 선진 해양수사를 위한 수사조직 개선	

[과제목표] △ 단기: 과학수사팀 → 해양과학수사센터 확대 △ 장기: 사이버수사대 신설

□ 추진 배경

○ **(미래 해양여건 대응)**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해사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 이러한 해양특수성에 맞는 해양과학수사센터 및 해양사이버수사대 신설 필요

□ 세부내용

○ **(사이버 · 과학수사센터)** 전문성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면서 해양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사이버범죄대응계 신설(총 정원 6명 → 23명)

사이버·과학수사센터 직제 구성

각 부서별 기능

기 획 계	과학수사 조직, 기획, 예산 등
현장지원계	중요사건 현장지원 및 지휘
법과학분석계	과학수사 감정업무 및 교육
연구개발계	과학수사 장비, 기법 등 개발
사이버범죄 대응계	사이버범죄·테러 모니터링*, 디지털포랜식 지원 및 통계관리

* 해양사이버범죄 사고 사례 : 진도 VTS 해킹('11년), 잠수함 설계도 유출('16년)

○ **(해양사이버수사과 신설)** 해양사이버수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 대응계를 **해양 사이버범죄수사과로 상향**

* 해양사이버수사과 신설을 위한 단·중기 전략

▮**(단 기)** 사이버범죄·테러 모니터링*, 디지털포렌식 지원, 우리청 사이버범죄 통계관리 등 사이버수사 기반마련을 위한 사이버범죄대응계 신설(~23년)

* 사이버범죄·테러 모니터링 중 주요 첩보 수집 시 형사과로 사건 이송

▮**(장 기)** 해양사이버수사과 신설(사이버범죄기획계, 사이버범죄수사계, 디지털포렌식 센터)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과학수사과 내 사이버범죄 대응반(2명)* 운영 * 사이버범죄 모니터링 1명, 디지털포렌식 1명 / 과학수사과 추가 1명 필요
'23년	❖ 과학수사과 내 사이버범죄수사계, 연구개발계 신설
'24년	❖ 과학수사과 및 법과학분석계 신설 추진
'25년	❖ 과학수사과 → 과학수사센터 추진 및 해양사이버수사과 신설('26년)
연중	❖ 본청·지방청 의견수렴 및 행안부 등 대응 논리 발굴

미래 친화적	나. 미래형 조직체계 구축	항 공
	3. 안정적 항공인력 확보를 위한 항공교육센터 설립	

[과제목표] ('22년) 연구용역, ('23~'24년) 정원·예산 확보, ('24~'26) 시설 확보 및 훈련기 도입

□ 추진 배경

○ 항공기 증강*, 정년퇴직 등에 따른 지속적 인력소요 증가 대비, 제한적 외부충원**에 의존한 불안정한 인력수급체계 개선 시급

* 항공기 도입계획 : 現 26대에서 '36년까지 50대 규모로 증강 추진 중

** 헬기조종사 충원 : 軍 배출인력(연간 40~50여명)에 의존 / 최근 충원률 70%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연구용역) 자체 조종사 양성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22년)

* 중장기 조종사 수요, 자체 교육기관 운영 예산·인력 대비 효율성, 방안별 장단점 등

○ (정원·예산) 소요정원 및 예산 확보, 교육체계(커리큘럼 등) 마련('23~'24년)

* 인력 30여명, 예산 약 640억원(훈련기 4대, 시뮬레이터 2기 등) 소요

○ (시설) 비행장, 청사, 격납고 등 훈련시설 확보 및 훈련기 도입('24~'26년)

* 무안공항 내 「통합 항공기지」 구축 연계, 정비고 및 훈련센터 등 건립 추진

<무안 통합항공기지 예정 부지>

<비행교육훈련센터 조감도>

<훈련기(참고사진)>

<항공기 시뮬레이터>

○ (기대효과) ❶안정적 항공인력 충원 ❷해양경찰 임무환경에 특화된 우수인력 확보 ❸체계적인 항공경찰관 교육훈련 기반 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해양경찰청 항공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23년	❖ 소요 정원 및 예산 요청
'24년	❖ 격납고 및 교육시설 착공 / 훈련기 도입 계약(3년차 사업)
'25년	❖ 직제 반영 및 인력 채용(1차)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26년	❖ '해양경찰청 항공교육센터' 개소

미래 친화적	다. 현장 중심형 미래 기술개발	교통관제
	1.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전국 통합 클라우드 VTS 개발(R&D)	

[과제목표] 전국 관제데이터 통합 및 VTS 표준 데이터 통신방식 연구개발(2차년도)

□ 추진 배경

○ MDA·빅데이터 구축(해경청), 자율운항선박 개발(산자부·해수부) 등 **첨단 4차 산업 기술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VTS 통합 플랫폼 필요**

❖ **연구기간** : '21~'23(3년간) / **예산** : 총 75억('21. 10억, '22. 31억, '23. 34억)
┌ **위탁관리 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 **연구기관** : (**주관**) ㈜지씨 / (**공동**) 한국해대·목포해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6개 기관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전국연계)** 관제데이터를 중앙에서 수집·처리하고 VTS 뿐 아니라 경비함정·상황실 등과 정보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 **(통신방식 표준화)** 레이더 등 각 VTS에서 수집·처리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통신방식 연구**

○ **('22년 이행계획)** 운영시스템 등 **시작품 및 운영매뉴얼 등 개발**

【 클라우드 VTS 개념도】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2년차 착수보고회(2월), 진도점검(7월), 연구 단계평가(12월)
'23년	❖ 3년차 기술개발, VTS센터에 테스트베드 설치하여 기술 검증 및 연구과제 완료
'24년	❖ '24~'27년(4년간) 개발기술 고도화 및 전국 확대를 위한 기본·실시설계

미래 친화적	다. 현장 중심형 미래 기술개발	정보통신
	2. 공공복합 통신위성 도입 및 한국형 항법위성 개발	

[과제목표] **자체 통신·항법위성 도입** ('22년) 통신 탑재체 설계, 연구용역 →('~27년) 인프라 구축

□ 추진 배경

○ 광역 MDA 통합플랫폼 구축 등 위성통신 기반 해양감시 자산 증가 로 위성통신 활용 수요의 급격한 증가 ⇨ 자체 통신위성 개발 진행('21.4~)

* 300MHz(Ka대역)를 해양경찰청 독자 운용(現 Ku 대역 120MHz의 2.5배)

○ 정확한 위치·항법·시각 정보의 국산화를 위한 항법위성 **총 8기**(정기궤도 3기, 경사지구동기궤도 4기, 예비 1기) 개발 착수('22년~)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MDA 구축, 함정 정보화 시스템 증가 등 위성통신 소요에 맞는 고효율 통신성능의 Ka 대역 신규 통신위성 탑재체 및 빔 설계('22년)

○ 위성 주파수 변화(現 Ku → 新 Ka대역)에 따른 대역별 운용 세력 구분 등 무궁화(Ku)·천리안(Ka) 위성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 Ka 단독 또는 Ku·Ka 혼용 등 운용 방안 분석('22~'24) → 시스템 구축('25~'26)

○ 신규 위성 도입에 따른 지상(주·부 중심국)·함정 위성통신 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건 분석·설계 및 시스템 도입('22~'27년)

○ 항법위성의 PNT* 정보를 이용, 정확도가 향상된 수신체계 구축 및 긴급 경보 메시지 송출을 통한 수색구조 역량 강화

* PNT(Pointing Navigation Timing) : 위치항법 시각정보를 이용한 상세 위치정보 확인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통신위성 탑재체 설계·인프라 연구 용역 추진, 항법위성 사업 착수 추진
'23년	❖ 지상 인프라 구축 관련 중장기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대응
'24년	❖ 통신위성 지상 및 함정 수신 인프라 구축, 항법위성 탑재체 설계
'25년	❖ 통신위성 지상 및 함정 수신 인프라 구축, 항법위성 탑재체 설계
연중	❖ 통신위성 탑재체 설계 협의 등 탑재체 개발 우리청 요구 사항 협의·반영

미래 친화적	다. 현장 중심형 미래 기술개발	관제기술
	3. VTS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 및 관제지원 기술 개발	

[과제목표]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첨단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기능 강화

□ 추진 배경

○ VTS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로 단기간(약2개월) 보존 후 사장되는 실정

- 내부센서(레이더, AIS 등)와 외부데이터(Port-MIS 등)를 수집하여 **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세부내용) VTS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해 **통계분석시스템, 전자관제일지 및 인공지능(AI) 기반 관제지원시스템 등 신기술 개발**

○ **(기대효과)** VTS 데이터를 통합관리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향후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하여 전국 데이터 통합 및 관제지원 기술 도입**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통계분석시스템 시작품 설치(8월), 관제지원시스템 시작품 현장설치(10월)
'23년	❖ VTS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개발 완료(12월)
'24년	❖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방안 마련(12월)
'25년	❖ VTS빅데이터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 연계 및 전국VTS 시스템 적용
연중	❖ VTS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개발(R&D) 과제 관리

미래 친화적	라.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체계 마련	기획재정
	1. 미래안보 안전을 위한 해양경찰 플랫폼 전략 추진	

[과제목표] 분산된 정부 역량 통합으로 국가 해양력을 주변국 수준으로 강화

□ 추진 배경

○ 美·中 **해양 패권시대**, '해양치안기관'을 전면에 내세운 **주변국 해양 전략**에 대비해 'MDA 체계'를 매개로 국가 해양력 강화를 선도 추진

○ 바다를 경유하는 **신종 안보위협*** 부각에 따라 해양에서 가장 넓은 업무 스펙트럼과 대규모 집행력을 가진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

* 미세먼지, 원전오염수, 해양쓰레기, 중국발 저염분수, 부유식 해양생물, 국제범죄 등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가전략 마련)**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칭) 포괄적 해양안보 강화 전략**(White-Hull Strategy)**'** 을 마련하여 **중장기·일관적인 정책방향성** 구축

※ 전략수립 연구용역→부처합동 세미나(공론화)→국무회의·NSC상정 추진('22.下)

○ **(정보 융·복합)** 日 등 주변국 사례(범정부 해양상황표시시스템*)를 참고해 정부 부처에 분산된 해양 정보를 융합한 **'범정부 해양정보 통합체계 구축'**

※ (日 사례) '19년 총리 지원下 '해보청 주도' 정보 통합(15개 기관, 200종), 플랫폼 구축·총괄관리는 '해상보안청 주관', 각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별 책임 관리

○ **(국제협력 강화)** 세계 각국은 해양정보 역량 강화(MDA체계)를 공공외교 및 영향력 확대에 활용, 우리 또한 국제 'MDA 강화 협력*' 본격 시행

* 해양정보 공유(위성, 해양데이터, 범죄첩보, 선박동향 등), ODA(교육훈련·안전·환경·치안·교통 등)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관계부처 합동 '포괄적 해양안보 강화 전략' 수립
'23년	❖ 범정부 해양정보 통합시스템 ISP 추진
'24년	❖ 동남아 등 주변국과 'MDA 강화 협력' 본격 시행
연중	❖ 국무회의. NSC 등 국가정책 결정회의에 해양안보 강화 전략 상정 지속 추진

미래 친화적	라.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체계 마련	해양안전
	2. 구조안전 임무에 최적화된 미래 파출소 모델 개발	

[과제목표] **新 구조안전조직** ('22년) 연구용역 → ('26년) 新 청사 완공 및 조직 출범

□ 추진 배경

○ **(임무 변화)** 주로 범죄예방 및 단속,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어선 출입항신고 접수 등이나 세월호 사고 이후 구조·안전임무 집중

* 해양사고: ('18) 3,434척→('19) 3,820척→('20) 3,778척 ** 인명피해 : ('18) 89명→('19) 88명→('20) 70명

○ **(구조거점 파출소 개선 필요)** 정책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조거점파출소 운영('18~) 중이나, 잠수인력 훈련부족 등 문제 노출

* 구조거점 26개소 설치경과 : ('18년) 12개소 → ('19년) 13개소 → ('21년)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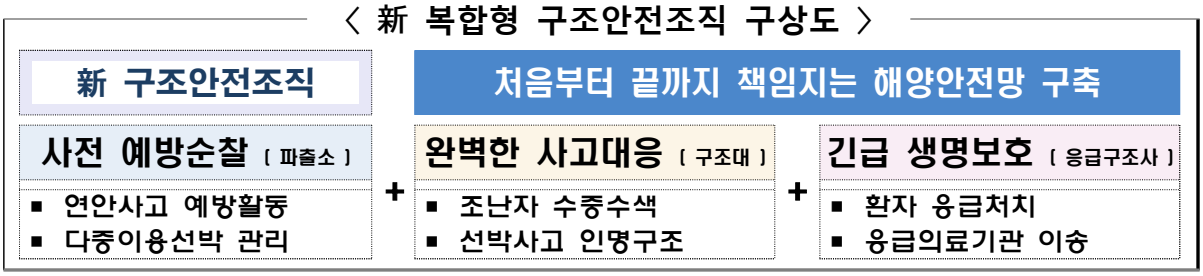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구조거점 파출소 공과분석)** 시행 4년간 구조거점파출소 운영에 따른 대응시간, 구조율 등 파급효과 분석 후 보완·발전방안 발굴

○ **(파출소 발전방안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최하위 집행조직 비교 등 파출소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

○ **(신 구조안전조직 모델 개발)** 구조안전관리 조직 규모를 키워 분산된 해양구조세력 통합, 대응체계 일원화된 신 조직 및 복합청사 개발

〈 新 복합형 구조안전조직 구상도 〉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구조안전 중심 미래 파출소 모델 연구용역
'23년	❖ 파출소 미래 발전계획 수립
'24년	❖ 신 구조안전조직 모델 시범운영 및 설계·건축예산 확보
'25년	❖ 복합청사 설계 및 신축 추진
'26년	❖ 신 조직 모델 출범

미래 친화적	라.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체계 마련	수상레저
	3. 친환경 수상레저기구 제도권 수용	

[과제목표] 탈탄소화 정책에 따른 친환경(전기, 수소연료) 기구 검사기준 마련

□ 추진 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강화** 등으로 전기추진, 수소 등 **환경친화적 선박수요 증가** 전망

< IMO 감축목표 >

○ 전기추진, 축전기 등에 대한 검사기준이 있는 선박·어선과 달리 **레저기구는 관련 기준 부재,** 친환경 **검사기준 마련 필요**

* '21년 친환경 기구 규제개선 요청사례 4건(전기추진 보트 규제샌드박스 건의 등)

** (선박·어선기준) 전기추진 선박기준 및 축전지 어선 설비기준(해수부고시 '20.5.21. 시행)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내·외 친환경 레저기구** 기술개발 동향 파악 등 레저기구 추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검사 기준(고시) 마련**('22년 연구용역 예정)

* 레저기구는 대다수 FRP(96%) 재질이며, 추진형태(선외기 83%) 등이 **일반선박과 상이하므로 기구 특성**(화재취약, 소형 등)**에 맞는 검사·설비기준 마련** 필요

〈 연구용역 개요 〉

- **(과업명)** 「친환경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
- **(예산/기간)** 일천만원(260-01, 연구용역비) / 계약일로부터 90일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분기	❖ 연구용역 추진(2~5월)
2분기	❖ 연구용역 추진(2~5월),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6월)
3분기	❖ 규제심사 및 해양경찰위원회 심의(7~9월)
4분기	❖ 고시 발령(10월)

미래 친화적	라.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체계 마련	방제기획
	4.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블루카본' 보호대책 추진	

[과제목표] **방제법령 제정** ('22년) 방제법령 제정 추진 → ('23년) 방제법령 제정

□ 추진 배경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에 따른 '국가 탄소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블루카본' 보전 등 환경 규제 강화 전망**

* 2050년까지 탄소 발생량과 흡수량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2030년 NDC 목표를 40%로 설정

○ 국민은 **해양 재난 긴급구조 기관**이며, **현장 집행력을 보유한 해양경찰의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요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염물질 해양 유입 예방 및 블루카본 보호 적극 참여

□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블루카본 해양오염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갯벌·습지 예방활동 강화

○ 해양오염 사고대응 및 훈련 시 **블루카본 우선 보호전략*** **등 수립·시행**

* 광역·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RCP) 개정 및 방제훈련(현장·도상) 시행 시 반영

○ **블루카본지역** 조사, 자원정보를 **방제시스템**(KOSPS, Pre-SCAT 등) **반영**

○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적 이슈**를 **주제**로 **방제요원**의 **역량 강화 지원**

* 탄소중립,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방제기술 아카데미」 개최, 「소식지」 배포

□ 추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22년	❖ 블루카본 해양오염 예방 기본계획 수립(4월)
	❖ 해양오염 사고대응 및 훈련 시 블루카본 우선 보호전략 등 시행(연중)
'23년	❖ 블루카본 지역 조사, 자원정보를 방제시스템 상 반영
연중	❖ 탄소중립, 블루카본 등을 주제로 「방제기술 아카데미」 개최, 「소식지」 배포